

대전·충남 행정통합 및 대전시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ITY COUNCIL

제출문

대전광역시의회 귀중

본 보고서를
「대전·충남 행정통합 및 대전시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조사수행기관명 : (주)메타서치
조사수행기관 책임자 : 최정규 대표이사

목 차

I. 조사 개요

1. 조사명칭	3
2. 조사배경 및 목적	3
3. 조사설계	3
4. 조사방법 및 내용	3
5. 조사절차	5
6. 응답 결과	6

II. 조사결과 요약

1. 응답자 특성	9
2. 조사결과 요약	12
3. 총평	20
4. 제언	25

III. 세부 조사결과

1.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	
가. 인지 수준	30
2.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인식	
가.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평가	32
가-1. 긍정 이유	34
가-2. 부정 이유	36

3.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가. 행정통합의 기대효과	38
나. 우선 추진과제	54
4. 통합 추진 과정 및 문제점 인식	
가. 추진 과정 평가	58
5. 참여 의향 및 투표 행동	
가. 주민투표 필요성 인식	66
나. 공론화 활동 참여 의향	68

<부록> 조사 문항

1. 조사설문지	73
----------------	----

* 본 보고서는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 분석한 후 빈도는 소수 첫째자리, 비율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운딩(반올림) 오류에 의해 전체 합이 각 항목의 합 또는 비율보다 작거나 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 조사 개요

조	사	명	칭
조	배	및	적
조	사	설	계
조	방	및	용
응	사	절	차
	답	결	과

1. 조사명칭 : 대전·충남 행정통합 및 대전시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2. 조사배경 및 목적

-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정책 기초자료 마련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인하고, 대전시가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과 추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함

3. 조사설계

- 가. 모집단: 대전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여
- 나. 과업 기간: 2025년 11월 10일(월) ~ 12월 29일(월) (총 50일)
- 다. 표본 크기: 총 1,000명
- 라. 표본추출방법: 지역(구), 연령, 성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 마. 조사의뢰 :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장

4. 조사방법 및 내용

가. 조사방법

조사 방법	표본 수 (명)	비율 (%)	비고
온라인(모바일) 조사	1,000	100.0	

나. 조사 내용 : 총 23문항

구분	문항		항 목	비 고
S Q	성별	SQ1	남성, 여성	
	연령	SQ2	17세 미만, 18세~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지역	SQ3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대전 외	
	거주 기간	SQ4	1년 미만, 1~5년, 6~10년, 11년 이상	
설명글		-		
본 질 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	A1	인지수준	객관식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인식	B1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평가	〃
		B1-1	↳(B1 ①,② 응답자) 긍정이유	〃
		B1-2	↳(B1 ④,⑤ 응답자) 부정이유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C1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	〃
			대전·충남의 자립경제 기반 강화	
			대전·충남 간 생활·경제권 통합	
			수도권 대학·기업 유치 확대	
			광역 교통망 확충 (BRT, 광역철도 등)	
			세종시 행정수도와의 연계를 통한 대전의 위상 강화	
			교통·산업 등 기반 시설 확충	
			지역 문화 및 관광 활성화	
		C2	우선 추진과제	순위응답
	통합 추진 과정 및 문제점 인식	D1	절차적 투명성	객관식
주민의견 수렴				
지역 정체성 훼손 우려				
갈등 유발 가능성				
참여 의향 및 투표 행동	E1	주민투표 필요성 인식	〃	
	E2	공론화 활동 참여 의향	〃	

※ 발주처 협의를 통해 조사 문항을 설계함.

5. 조사절차

가. 1단계: 착수보고 및 문항 설계

- 기간: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21일(금)
- 조사 설계: 조사대상 선정, 표본 설계
- 설문지 작성: 설문지(안) 작성 및 발주처 확인을 통한 설문 확정

나. 2단계: 실사 준비 및 수행

- 기간: 2025년 11월 21일(금) ~ 12월 15일(월)
- 조사 준비: 코딩 및 시스템 세팅, 테스트
- 조사실행

구분	사 례 수	실 사 일 정	소요기간
합 계	1,000명		
온라인	1,000명	11월 28일(금) ~ 12월 15일(월)	18일

다. 3단계: 조사 통계 분석

- 기간: 2025년 12월 15일(월) ~ 12월 17일(수)
- 빈도 및 교차분석
- 가중치 적용: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적용
(행안부 2025. 11.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라. 4단계: 보고서 작성 및 최종 납품

- 기간: 2025년 12월 17일(수) ~ 12월 29일(월)
- 보고서 작성: 빈도 및 교차분석, 분석 테이블 및 인포그래픽 작성
- 최종 산출물 납품

6. 응답 결과

가. 표본 크기: 1,000명 조사 성공

나.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3.1\%p$

다. 응답률: 47.3%

구 분	응답률 (B/A)	조사 성공 (B)	조사시도 (A)	비 고
내 용	47.3%	1,000명	2,1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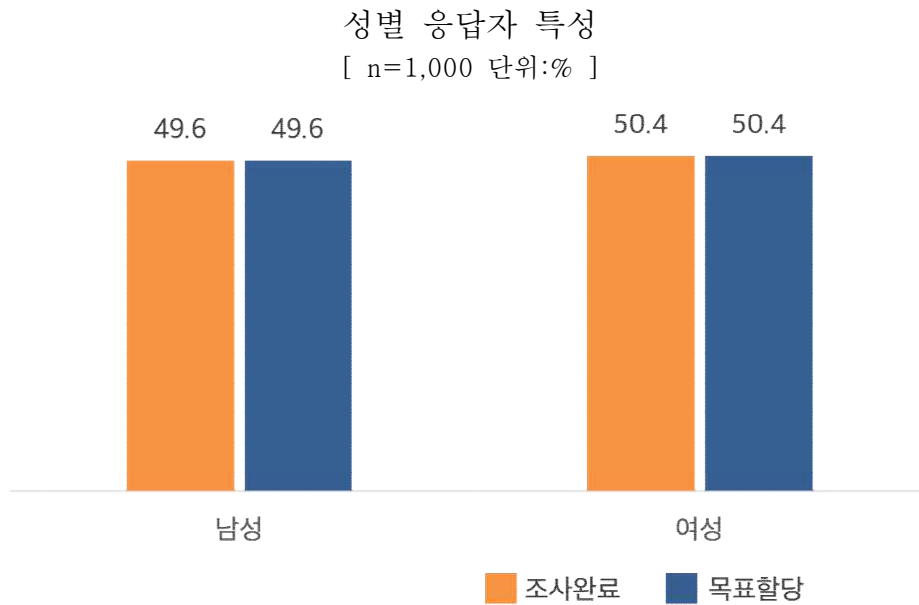
II. 조사결과 요약

응답자 특성
조사결과 요약
총평 및 제언

1.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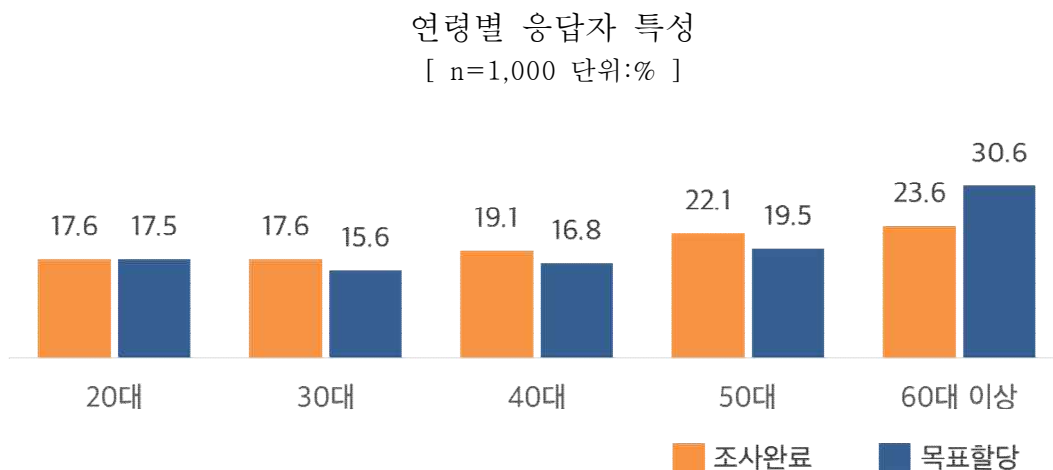
가. 성별 응답

- 성별 인구 비례 목표할당 대비 조사 완료 표본 수는 남성은 49.6%, 여성 50.4% 목표할당에, 전체 응답자 중 남성 49.6%, 여성 50.4%가 응답 완료함.



나. 연령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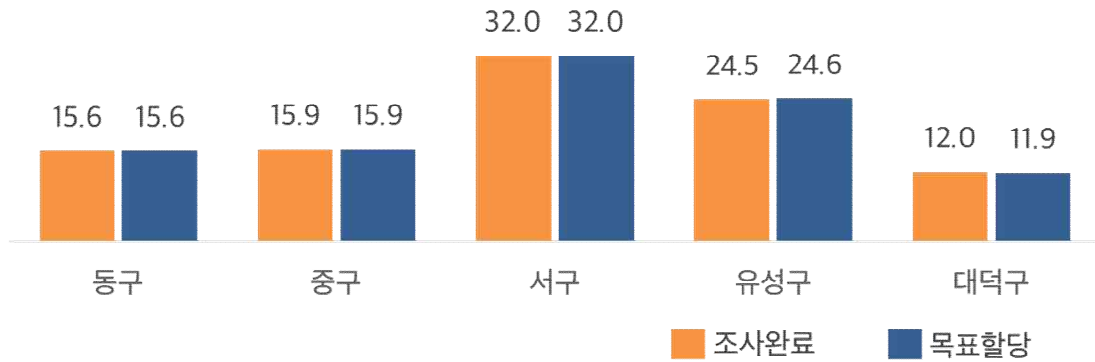
- 연령별 인구 비례 목표할당 대비 조사 완료 표본 수는 20대 17.5%, 30대 15.6%, 40대 16.8%, 50대 19.5%, 60대 이상 30.6% 목표할당에, 전체 응답자 중 20대 17.6%, 30대 17.6%, 40대 19.1%, 50대 22.1% 60대 이상 23.6%가 응답 완료함.



다. 지역별 응답

- 지역별 인구 비례 목표할당 대비 조사 완료 표본 수는 동구 15.6%, 중구 15.9%, 서구 32.0%, 유성구 24.6%, 대덕구 11.9% 목표할당에, 전체 응답자 중 동구 15.6%, 중구 15.9%, 서구 32.0%, 유성구 24.5%, 대덕구 12.0% 응답 완료함.

지역별 응답자 특성
[n=1,000 단위:%]



라. 응답자 특성

구 분		조사 완료		목표할당		가중값 배율 (B/A)
		사례수(명) (A)	비율 (%)	사례수(명) (B)	비율 (%)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
성별	남성	496	49.6	496	49.6	1.00
	여성	504	50.4	504	50.4	1.00
연령	20대	176	17.6	176	17.5	1.00
	30대	176	17.6	155	15.6	0.88
	40대	191	19.1	167	16.8	0.87
	50대	221	22.1	195	19.5	0.88
	60대 이상	236	23.6	307	30.6	1.30
지역	동구	156	15.6	156	15.6	1.00
	중구	159	15.9	159	15.9	1.00
	서구	320	32.0	320	32.0	1.00
	유성구	245	24.5	245	24.6	1.00
	대덕구	120	12.0	120	11.9	1.00
거주 기간	1년 미만	19	1.9	-	-	-
	1~5년	97	9.7	-	-	-
	6~10년	86	8.6	-	-	-
	11년 이상	798	79.8	-	-	-

※ 대전 거주 기간 1년 미만 응답자는 표본수가 30명 미만으로 적어, 통계적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조사결과 요약

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

1) 인지 수준 [n=1,000, %]

구 분	적극인지 (a)	소극인지 (b)	보통	소극 비인지 (c)	적극 비인지 (d)
응답수(명)	25	302	252	299	122
비율(%)	2.5	30.2	25.2	29.9	12.2
구 분	인지 (a+b)		보통	비인지 (c+d)	
응답수(명)	327		252	421	
비율(%)	32.7		25.2	42.1	

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인식

1)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평가 [n=1,000, %]

구 분	매우 긍정 (a)	다소 긍정 (b)	잘 모름	다소 부정 (c)	매우 부정 (d)
응답수(명)	57	252	414	221	56
비율(%)	5.7	25.2	41.4	22.1	5.6
구 분	긍정 (a+b)		잘 모름	부정 (c+d)	
응답수(명)	309		414	277	
비율(%)	30.9		41.4	27.7	

2) 긍정평가 이유 [Base=행정통합에 대한 기본평가 ‘긍정’ 응답자 n=309, %]

구 분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서비스 확대	재정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광역 인프라 (교통·산업벨트 등) 구축
응답수(명)	95	21	103	84
비율(%)	30.7	6.7	33.4	27.3

구 분	추진 준비 및 실행 체계 강화 기대	기타
응답수(명)	2	4
비율(%)	0.7	1.2

3) 부정평가 이유 [Base=행정통합에 대한 기본평가 ‘부정’ ’ 응답자 n=277, %]

구 분	대전충남 간 입장 차이 조정 어려움	중앙정부 지원 부족	지역 간 발전 격차 확대 우려	대전시 자체 발전 저해 가능성
응답수(명)	75	6	29	75
비율(%)	27.1	2.2	10.5	27.1

구 분	추진 준비 부족 및 효과 불확실성	기타
응답수(명)	88	4
비율(%)	31.8	1.4

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1-1)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 [n=1,000, %]

구 분	매우 도움 됨 (a)	다소 도움 됨 (b)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c)	전혀 도움 안 됨 (d)
응답수(명)	48	340	353	215	44
비율(%)	4.8	34.0	35.3	21.5	4.4
구 분	도움 됨 (a+b)		보통	도움 안 됨 (c+d)	
응답수(명)	388		353	259	
비율(%)	38.8		35.3	25.9	

1-2) 대전·충남의 자립경제 기반 강화 [n=1,000, %]

구 분	매우 도움 됨 (a)	다소 도움 됨 (b)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c)	전혀 도움 안 됨 (d)
응답수(명)	61	362	363	171	43
비율(%)	6.1	36.2	36.3	17.1	4.3
구 분	도움 됨 (a+b)		보통	도움 안 됨 (c+d)	
응답수(명)	423		363	214	
비율(%)	42.3		36.3	21.4	

1-3) 대전·충남 간 생활·경제권 통합 [n=1,000, %]

구 분	매우 도움 됨 (a)	다소 도움 됨 (b)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c)	전혀 도움 안 됨 (d)
응답수(명)	115	402	299	150	34
비율(%)	11.5	40.2	29.9	15.0	3.4
구 분	도움 됨 (a+b)		보통	도움 안 됨 (c+d)	
응답수(명)	517		299	184	
비율(%)	51.7		29.9	18.4	

1-4) 수도권 대학·기업 유치 확대 [n=1,000, %]

구 분	매우 도움 됨 (a)	다소 도움 됨 (b)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c)	전혀 도움 안 됨 (d)
응답수(명)	48	274	389	220	69
비율(%)	4.8	27.4	38.9	22.0	6.9
구 분	도움 됨 (a+b)		보통	도움 안 됨 (c+d)	
응답수(명)	322		389	289	
비율(%)	32.2		38.9	28.9	

1-5) 광역 교통망 확충 [n=1,000, %]

구 분	매우 도움 됨 (a)	다소 도움 됨 (b)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c)	전혀 도움 안 됨 (d)
응답수(명)	140	468	256	103	33
비율(%)	14.0	46.8	25.6	10.3	3.3
구 분	도움 됨 (a+b)		보통	도움 안 됨 (c+d)	
응답수(명)	608		256	136	
비율(%)	60.8		25.6	13.6	

1-6) 세종시 행정수도와의 연계를 통한 대전의 위상 강화 [n=1,000, %]

구 분	매우 도움 됨 (a)	다소 도움 됨 (b)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c)	전혀 도움 안 됨 (d)
응답수(명)	97	325	364	170	44
비율(%)	9.7	32.5	36.4	17.0	4.4
구 분	도움 됨 (a+b)		보통	도움 안 됨 (c+d)	
응답수(명)	422		364	214	
비율(%)	42.2		36.4	21.4	

1-7) 교통·산업 등 기반 시설 확충 [n=1,000, %]

구 분	매우 도움 됨 (a)	다소 도움 됨 (b)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c)	전혀 도움 안 됨 (d)
응답수(명)	97	409	341	119	34
비율(%)	9.7	40.9	34.1	11.9	3.4
구 분	도움 됨 (a+b)		보통	도움 안 됨 (c+d)	
응답수(명)	506		341	153	
비율(%)	50.6		34.1	15.3	

1-8) 지역 문화 및 관광 활성화 [n=1,000, %]

구 분	매우 도움 됨 (a)	다소 도움 됨 (b)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c)	전혀 도움 안 됨 (d)
응답수(명)	86	359	358	153	44
비율(%)	8.6	35.9	35.8	15.3	4.4
구 분	도움 됨 (a+b)		보통	도움 안 됨 (c+d)	
응답수(명)	445		358	197	
비율(%)	44.5		35.8	19.7	

2) 우선 추진 과제 [n=1,000, case=2,000 1·2순위, %]

구 분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자치권 확대	지역 인력·기 술·정보 의 통합 및 공유 강화	사도 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강화	광역철도 등 광역사업 의 공동 추진 및 유기적 운영 강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해결	대전·충 남의 공동 현안의 신속한 해결	기타
1 순 위	응답수 (명)	159	161	215	174	164	118	9
	비율 (%)	15.9	16.1	21.5	17.4	16.4	11.8	0.9
2 순 위	응답수 (명)	70	167	194	191	210	167	1
	비율 (%)	7.0	16.7	19.4	19.1	21.0	16.7	0.1

라. 통합 추진 과정 및 문제점 인식

1-1) 절차적 투명성 [n=1,000, %]

구 분	매우 긍정 (a)	다소 긍정 (b)	잘 모름	다소 부정 (c)	매우 부정 (d)
응답수(명)	24	122	569	224	61
비율(%)	2.4	12.2	56.9	22.4	6.1
구 분	긍정 (a+b)		보통	부정 (c+d)	
응답수(명)	146		569	285	
비율(%)	14.6		56.9	28.5	

1-2) 시민의견 수렴 [n=1,000, %]

구 분	매우 긍정 (a)	다소 긍정 (b)	잘 모름	다소 부정 (c)	매우 부정 (d)
응답수(명)	22	103	464	321	90
비율(%)	2.2	10.3	46.4	32.1	9.0
구 분	긍정 (a+b)		보통	부정 (c+d)	
응답수(명)	125		464	411	
비율(%)	12.5		46.4	41.1	

1-3) 정체성 훼손 우려 [n=1,000, %]

구 분	매우 긍정 (a)	다소 긍정 (b)	잘 모름	다소 부정 (c)	매우 부정 (d)
응답수(명)	54	255	433	222	36
비율(%)	5.4	25.5	43.3	22.2	3.6
구 분	긍정 (a+b)		보통	부정 (c+d)	
응답수(명)	309		433	258	
비율(%)	30.9		43.3	25.8	

1-4) 갈등 유발 가능성 [n=1,000, %]

구 분	매우 긍정 (a)	다소 긍정 (b)	잘 모름	다소 부정 (c)	매우 부정 (d)
응답수(명)	71	376	386	146	21
비율(%)	7.1	37.6	38.6	14.6	2.1
구 분	긍정 (a+b)		보통	부정 (c+d)	
응답수(명)	447		386	167	
비율(%)	44.7		38.6	16.7	

마. 참여 의향 및 투표 행동

1) 주민투표 필요성 인식 [n=1,000, %]

구 분	매우 긍정 (a)	다소 긍정 (b)	잘 모름	다소 부정 (c)	매우 부정 (d)
응답수(명)	261	417	253	59	10
비율(%)	26.1	41.7	25.3	5.9	1.0
구 분	긍정 (a+b)		잘 모름	부정 (c+d)	
응답수(명)	678		253	69	
비율(%)	67.8		25.3	6.9	

2) 공론화 활동 참여 의향 [n=1,000, %]

구 분	매우 긍정 (a)	다소 긍정 (b)	잘 모름	다소 부정 (c)	매우 부정 (d)
응답수(명)	79	299	431	140	51
비율(%)	7.9	29.9	43.1	14.0	5.1
구 분	긍정 (a+b)		잘 모름	부정 (c+d)	
응답수(명)	378		431	191	
비율(%)	37.8		43.1	19.1	

3. 총평

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

○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인지도 수준과 정보 접근의 편차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논의에 대해 시민의 32.7%가 인지하고 있으며, 42.1%는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시민 인지 수준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단계로 나타남.
- 한편, 20대(39.2%), 30대(39.1%), 60대 이상(34.5%), 50대(30.1%), 40대(20.2%) 순으로 ‘인지’ 응답률을 보여 향후 논의 확산 과정에서 40대 및 50대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이 시사됨. 또한 남성(인지 40.8%)에 비해 여성(인지 24.8%)의 인지 수준이 낮게 나타나, 성별 간 정보 접근 차이를 고려한 소통 전략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됨.

○ ‘관망세’ 상위 속 세대별 인식 차이

- 행정통합에 대한 긍·부정 의견은 전체 응답자 기준 긍정(30.9%)과 부정(27.7%)이 오차범위 내에서 대등한 수준을 보였으나, 행정통합 추진 논의 인지층(32.7%)만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한 결과 ‘긍정 43.8%, 부정 33.0%, 잘 모름 23.2%’로 나타나 긍정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됨. 전체적으로는 ‘잘 모름’ 응답이 41.4%에 달해 판단 유보층이 많았으나, 관련 정보를 인지할수록 유보적 입장이 줄어들고 찬성 의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세대별로는 60대 이상(긍정 45.0%)에서 상대적으로 긍정 인식이 높은 반면, 30대는 부정 응답(39.0%)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20대의 경우 ‘잘 모름’ 응답이 51.1%로 나타나, 통합 이슈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거나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vs 현실적 실행 불확실성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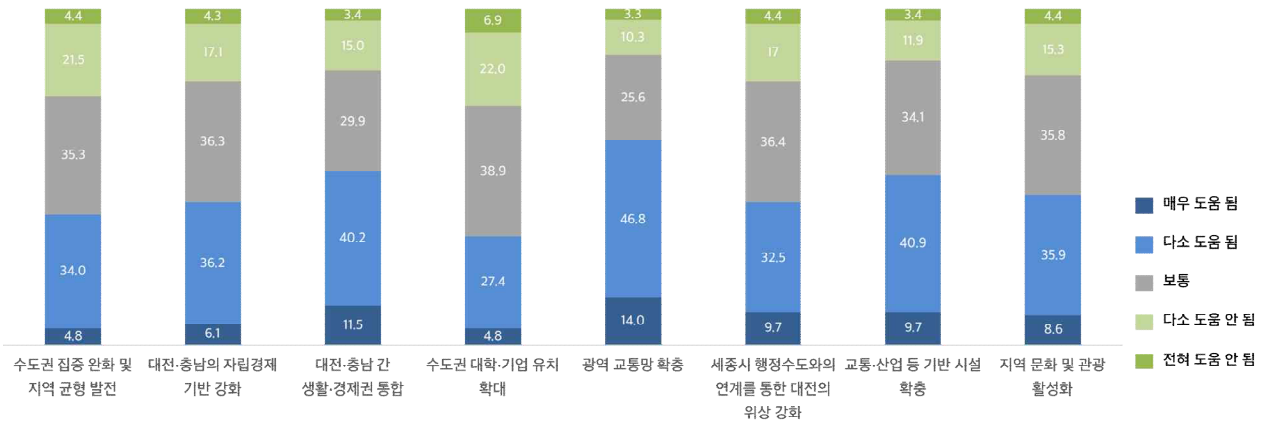
- 통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주요 이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33.4%)과 ‘행정 효율성 향상’ (30.7%)이 꼽힘. 이는 시민들이 행정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반면, 통합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응답자들은 ‘추진 준비 부족 및 효과의 불확실성’ (31.8%)을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제시했으며, ‘대전·충남 간 입장 차이 조정의 어려움’ (27.1%)과 ‘대전시 자체 발전

에 미칠 영향’ (27.1%)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타남. 이는 통합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 하드웨어(교통·인프라) 중심의 확실한 기대감 형성

- 8개 기대효과 항목 중 ‘광역 교통망 확충’ 이 긍정 응답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대전·충남 간 생활·경제권 통합’ (51.7%), ‘교통·산업 등 기반 시설 확충’ (50.6%)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시민들이 행정통합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로 도로·철도 연결 등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인프라 개선을 가장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즉, 생활권 확장과 이동 편의성 증대가 통합 효과를 체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그림1]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8개 항목

○ 인프라 기대와 대조되는 ‘기업 유치·균형발전’의 낮은 기대감

- 한편, ‘수도권 대학·기업 유치 확대’는 긍정 응답 32.2%로 8개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8.9%로 집계됨.
- 또한 통합의 주요 취지 중 하나인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역시 긍정 응답이 38.8%에 그쳐, 교통망 확충(60.8%)과 비교할 때 기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시민들이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에 그칠 경우, 수도권 집중 완화나 기업 유치 성과로 곧바로 이어지기에는 추가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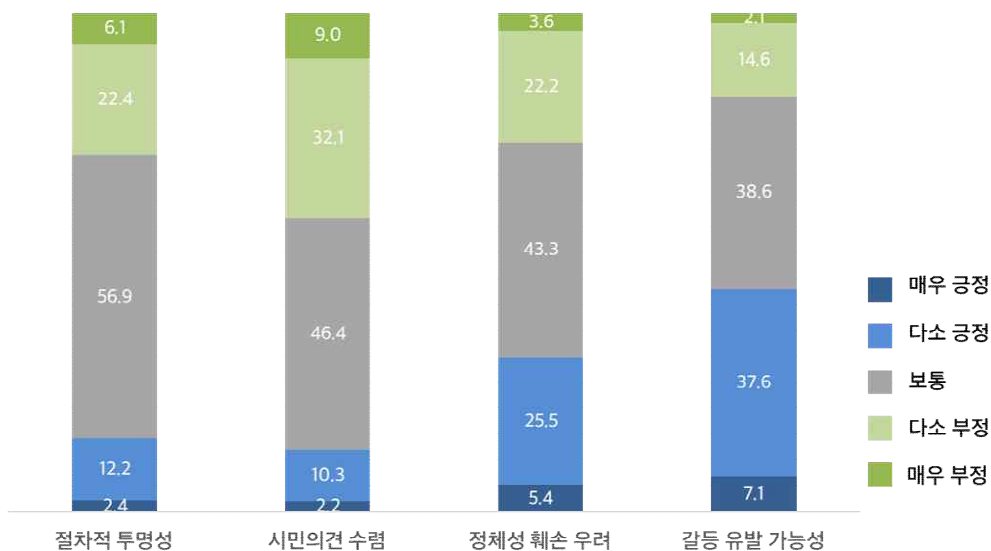
○ 통합의 선결 조건: 물리적 결합보다 ‘갈등 조정’ 과 ‘형평성’ 요구

- 우선 추진과제(1+2순위 합산) 조사 결과, ‘시·도 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강화’ 가 40.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이는 시민들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과 협력 구조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어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 이 37.4%로 나타나, 통합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장치 마련에 대한 기대가 함께 나타남.

○ 지역·세대별 기대 인식의 차이와 일부 집단의 신중한 평가

- 지역별로 보면, 유성구와 동구는 전반적인 기대효과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인 반면, 대덕구의 경우 ‘수도권 대학·기업 유치’ 항목에서 부정 응답(34.7%)이 긍정 응답(28.9%)을 상회하는 등, 일부 항목에서 기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이는 통합 효과에 대한 체감 정도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함.
- 세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높은 반면, 30대는 ‘수도권 집중 완화’ 항목에서 부정 응답(34.8%)이 긍정 응답(27.7%)보다 높게 나타나, 통합의 실효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인식을 보이는 경향이 확인됨.

다. 통합 추진 과정 및 문제점 인식



[그림2] 통합 추진 과정 및 문제점 인식 4개 항목

- 기대효과 대비 ‘보통’ 응답 급증: 정보 부재가 낳은 판단 유보
 - 앞서 살핀 기대효과 관련 8개 항목에서는 ‘보통’ 응답률이 대체로 20~30% 수준(광역 교통망 확충 25.6%, 생활·경제권 통합 29.9% 등)에 머물렀음. 반면, 통합 추진 과정 및 문제점 인식 항목에서 ‘절차적 투명성’ (56.9%) 항목 등 ‘보통’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시민들이 통합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대나 평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현재 진행 중인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판단을 유보하고 있음을 시사함.
 - 다시 말해,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과 소통 수준이 시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정보 공유 부족 속에서 나타난 절차적 체감과 소통에 대한 우려
 - 구체적인 정보 부족으로 판단을 유보한 응답(보통 46.4%)이 적지 않은 가운데, ‘시민 의견 수렴’ 항목에서는 부정 평가(41.1%)가 긍정 평가(12.5%)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인지는 낮은 상황에서도,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체감 수준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즉, 절차 전반에서 시민 참여와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해석됨.
 - 이러한 인식은 ‘갈등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긍정 44.7%)로도 연결되어, 시민들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조정 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주요 고려 요소로 보고 있음을 시사함.

라. 참여 의향 및 투표 행동

- ‘결정 참여’에 대한 높은 요구와 ‘과정 참여’의 신중한 태도
 - 행정통합의 최종 결정 방식에 대해 시민의 67.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시민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반면, 설명회·토론회 등 공론화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은 37.8% 수준에 그쳤으며, ‘보통’ 응답(43.1%)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다수 시민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시민들이 통합의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참여 의사를 분명히 하는 반면, 복합적인 논의와 정보 습득이 요구되는 추진 과정 참여에 대해서는 부담 요인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함.

○ 주민투표 요구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 주민투표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거주기간을 막론하고 모든 집단에서 60% 이상의 찬성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통합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인 20대(64.6%)와 30대(63.2%)에서도 주민투표 필요성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 절차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됨.

○ 청년층 참여 인식의 특성과 소통 방식 다변화 필요

- 공론화 활동 참여 의향에서 20대는 긍정(33.0%)과 부정(31.3%) 응답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응답(35.8%)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남.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참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보다 빠르게 형성되는 경향이 관찰됨을 의미함.
- 이러한 응답 분포는 청년층이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에 대해 단순히 관망하기보다는, 개인의 관심도와 참여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함. 아울러 기존의 설명회·토론회 중심 공론화 방식 외에도, 청년층의 생활 환경과 정보 이용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소통 채널과 참여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함께 보여줌.

4. 제언

-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인식과 요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언함.

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신뢰 제고

- 통합 논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온·오프라인 정보 접근성 강화
 - 조사결과, 통합 절차에 대해 ‘보통(유보)’ 응답이 56.9%에 달하고 인지도가 32.7%에 머무른 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함을 시사함. 이에 따라 향후 통합 추진 시에는 장점뿐만 아니라 쟁점 사항, 진행 절차, 예상되는 변화 등을 가감 없이 공개하는 ‘행정통합 정보 페이지(아카이브)’ 운영 등 정보 접근 채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판단 유보층’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 유입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세대별·생활 접점별 맞춤형 홍보 전략 전개

-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40·50대와 여성층을 고려하여, 거대 담론 위주의 홍보보다는 직장, 맘카페, 아파트 커뮤니티 등 생활 밀착형 채널을 활용한 홍보 비중을 늘려야 함.
- 이를 통해 시민들이 행정통합을 ‘나의 삶’과 직결된 이슈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인지도 제고와 함께 시민 관심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임.

나. ‘갈등 우려’ 불식을 위한 사전 소통 체계 마련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소통 협의체 구성 검토

- 시민들이 통합의 가장 큰 리스크로 ‘갈등 유발(44.7%)’을 우려하고 있으며, 최우선 과제로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강화’를 꼽은 점에 주목해야 함. 따라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앞서 행정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쟁점을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검토해야 함.
-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계층 간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

하고 조율함으로써, 소모적인 대립 비용을 줄이고 통합 논의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메시지 관리

- 대덕구 등 일부 지역에서 감지되는 소외 인식과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높은 요구(37.4%)를 고려하여, 통합 논의 시 특정 지역 소외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지역별로 상이한 기대감의 격차를 줄이고, 통합이 특정 지역만의 이익이 아닌 대전 전체의 상생 발전 방안임을 설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다. 시민의 ‘결정 효능감’ 을 높이는 참여 절차 설계

○ 주민투표 등 시민 의견 반영 절차의 구체화

- 시민의 67.8%가 행정통합의 결정 방식으로 ‘주민투표’ 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진 로드맵 수립 시 시민들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주민투표 또는 이에 준하는 공론화 과정)를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함.
- 이를 통해 통합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 주도의 일방적 추진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청년층의 관심 유도를 위한 소통 방식의 다변화

- 20대에서 공론화 참여 의향이 긍정과 부정으로 비교적 분산되어 나타나고, 유보적 응답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형식적인 설명회 방식으로는 청년층의 공감을 얻는 데 한계가 있음. 대학생 토론 배틀, 온라인 숏폼 콘텐츠 등 청년 세대의 화법에 맞는 소통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통합 이슈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청년층의 관심을 환기하고, 미래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는 논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실리’ 중심의 비전 제시 및 정부 지원 연계

○ 교통망 확충 등 ‘체감형 기대효과’ 중심의 비전 제시

- 시민들은 ‘수도권 기업 유치’ 같은 거시적 목표보다 ‘광역 교통망 확충

(60.8%)’ 등 실질적 인프라 개선에 더 큰 기대를 보임. 따라서 홍보 시 추상적인 구호보다는 광역철도, 도로망 연결,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이를 통해 통합의 효능감을 구체화하여, 막연하게 형성된 긍정적 기대를 실질적인 지지 여론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중앙정부의 지원 기조를 활용한 실질적 인센티브 확보 주력

-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론된 통합 지원 의사(대통령 발언 등)를 기회요인으로 삼아, 시민들이 원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나 특구 지정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합 논의와 연계해야 함.
- 이를 통해 “통합 시 지역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시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통합 추진의 현실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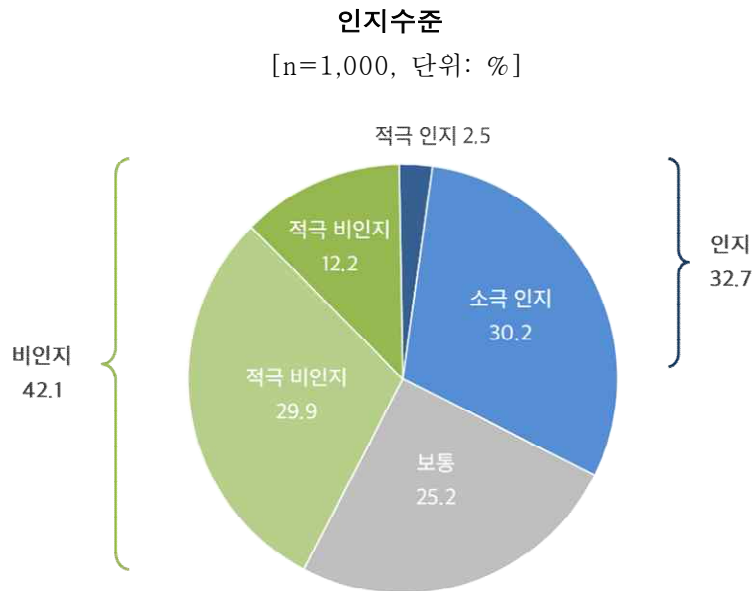
III. 세부 조사결과

대전 · 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
대전 · 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인식
대전 · 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통합 추진 과정 및 문제점 인식
참여 의향 및 투표 행동

1.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

가 인지 수준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논의에 대한 인지 여부 질문에, 비인지 42.1%(소극 비인지 29.9% + 적극 비인지 12.2%), 인지 32.7%(소극 인지 30.2% + 적극 인지 2.5%), 보통 25.2%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지’ 응답이 40.8%로 ‘비인지’(35.2%)보다 높게 나타남. 반면 여성은 ‘비인지’ 응답이 48.9%로 ‘인지’ (24.8%)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20대(39.2%), 30대(39.1%), 60대 이상(34.5%), 50대(30.1%), 40대(20.2%) 순으로 ‘인지’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보면, 5개 자치구 모두 ‘비인지’ 응답이 ‘인지’ 응답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남. ‘인지’ 응답률은 유성구(36.1%), 중구(32.7%), 동구(32.3%), 서구(32.2%), 대덕구(28.9%) 순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보면,

6~10년(38.8%), 1~5년(33.0%), 11년 이상(32.2%), 1년 미만(25.0%) 거주자 순으로 ‘인지’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구분		인지 수준(%)						인지 (a+b)	비인지 (c+d)
		적극인지 (a)	소극인지 (b)	보통	소극 비인지 (c)	적극 비인지 (d)			
합계		2.5	30.2	25.2	29.9	12.2	32.7	42.1	
성별	남성	3.2	37.6	24.0	24.2	10.9	40.8	35.2	
	여성	1.8	23.0	26.3	35.4	13.5	24.8	48.9	
연령	20대	2.8	36.4	19.9	28.4	12.5	39.2	40.9	
	30대	3.2	35.9	19.9	23.1	17.9	39.1	41.0	
	40대	1.8	18.5	26.8	34.5	18.5	20.2	53.0	
	50대	2.0	28.1	20.9	36.2	12.8	30.1	49.0	
	60대 이상	2.9	31.6	32.9	27.4	5.2	34.5	32.6	
지역	동구	2.6	29.7	32.3	27.1	8.4	32.3	35.5	
	중구	1.9	30.8	30.8	25.8	10.7	32.7	36.5	
	서구	2.8	29.4	22.2	33.4	12.2	32.2	45.6	
	유성구	1.6	34.4	18.9	30.7	14.3	36.1	45.1	
	대덕구	4.1	24.8	28.9	28.1	14.0	28.9	42.1	
거주 기간	1년 미만	5.0	20.0	30.0	25.0	20.0	25.0	45.0	
	1~5년	1.0	32.0	12.4	40.2	14.4	33.0	54.6	
	6~10년	0.0	38.8	20.0	32.9	8.2	38.8	41.2	
	11년 이상	2.9	29.3	27.1	28.4	12.3	32.2	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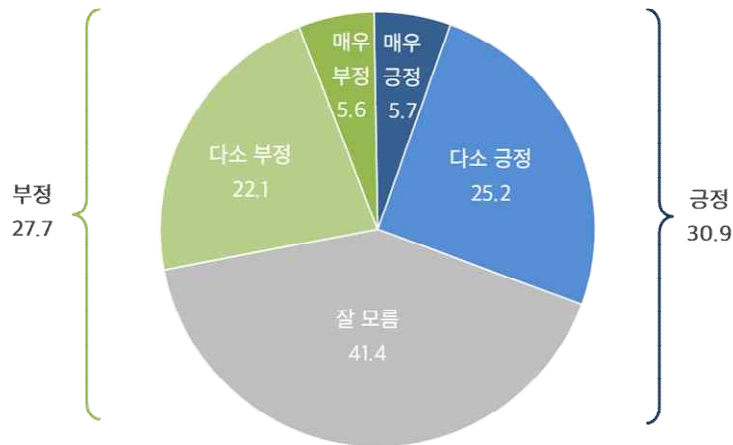
2.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인식

가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평가

-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질문에, 보통 41.4%, 긍정 30.9%(다소 긍정 25.2% + 매우 긍정 5.7%), 부정 27.7%(다소 부정 22.1% + 매우 부정 5.6%) 순으로 나타남.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평가

[n=1,000, 단위: %]



- 성별로 보면, ‘긍정’ 응답은 남성(32.7%)이 여성(29.3%)보다 높게 나타남. 다만 두 집단 모두 ‘잘 모름’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여성 43.8%, 남성 38.9%)을 차지함.
-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45.0%)에서 ‘긍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50대(30.9%), 40대(24.4%), 20대(21.6%), 30대(20.8%) 순으로 나타남. 특이점으로 30대는 ‘부정’ 평가가 39.0%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20대는 ‘잘 모름’ 응답이 51.1%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동구(34.0%)가 가장 높았으며, 서구(32.8%), 중구(30.6%), 유성구(30.2%), 대덕구(24.2%) 순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보면,

6~10년 거주자(37.2%)의 ‘긍정’ 평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11년 이상(30.6%), 1~5년 (28.9%), 1년 미만(26.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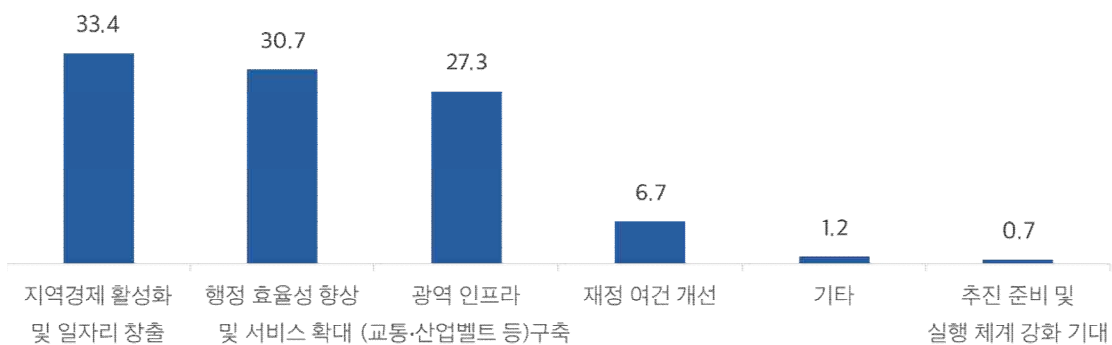
구분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평가(%)						긍정 (a+b)	부정 (c+d)
		매우 긍정 (a)	다소 긍정 (b)	잘 모름	다소 부정 (c)	매우 부정 (d)			
합계		5.7	25.2	41.4	22.1	5.6	30.9	27.7	
성별	남성	7.7	25.0	38.9	21.2	7.3	32.7	28.4	
	여성	4.0	25.3	43.8	23.0	4.0	29.3	26.9	
연령	20대	4.0	17.6	51.1	22.2	5.1	21.6	27.3	
	30대	1.3	19.5	40.3	30.5	8.4	20.8	39.0	
	40대	2.4	22.0	47.6	22.0	6.0	24.4	28.0	
	50대	6.2	24.7	40.7	21.6	6.7	30.9	28.4	
	60대 이상	10.7	34.2	33.6	17.9	3.6	45.0	21.5	
지역	동구	7.1	26.9	44.2	17.9	3.8	34.0	21.8	
	중구	5.0	25.6	41.3	25.0	3.1	30.6	28.1	
	서구	6.3	26.6	40.6	19.7	6.9	32.8	26.6	
	유성구	6.5	23.7	38.8	24.9	6.1	30.2	31.0	
	대덕구	1.7	22.5	45.8	23.3	6.7	24.2	30.0	
거주 기간	1년 미만	0.0	26.3	47.4	10.5	15.8	26.3	26.3	
	1~5년	8.2	20.6	49.5	19.6	2.1	28.9	21.6	
	6~10년	5.8	31.4	41.9	18.6	2.3	37.2	20.9	
	11년 이상	5.5	25.1	40.3	23.0	6.1	30.6	29.1	

나 긍정평가 이유

-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질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33.4%,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서비스 확대 30.7%, 광역 인프라 구축 27.3%, 재정 여건 개선 6.7%, 기타 1.2%, 추진 준비 및 실행 체계 강화 기대 0.7% 순으로 나타남.

긍정평가 이유

[Base=행정통합에 대한 기본평가 '긍정' 응답자, n=309, 단위: %]



- 성별로 보면, 여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37.4%)과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서비스 확대’(32.0%)의 응답률이, 남성은 ‘광역 인프라 구축’(31.7%)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20대(44.7%)와 30대(39.4%), 50대(39.0%)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응답률이 40% 내외로 높게 나타남. 반면 40대는 ‘광역 인프라 구축’(34.1%)이, 60대 이상은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서비스 확대’(34.8%)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보면, 거주지역별로 보면, 대덕구(44.8%)는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서비스 확대’, 중구(41.7%)와 동구(34.0%)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유성구(39.2%)는 ‘광역 인프라 구축’의 응답률이 각 지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반면 서구는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서비스 확대’ (33.3%)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33.3%)이 동일하게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거주기간별로 보면,

6~10년 거주층은 ‘광역 인프라 구축’(40.6%)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1년 이상 거주층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35.0%)와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서비스 확대’(34.2%) 응답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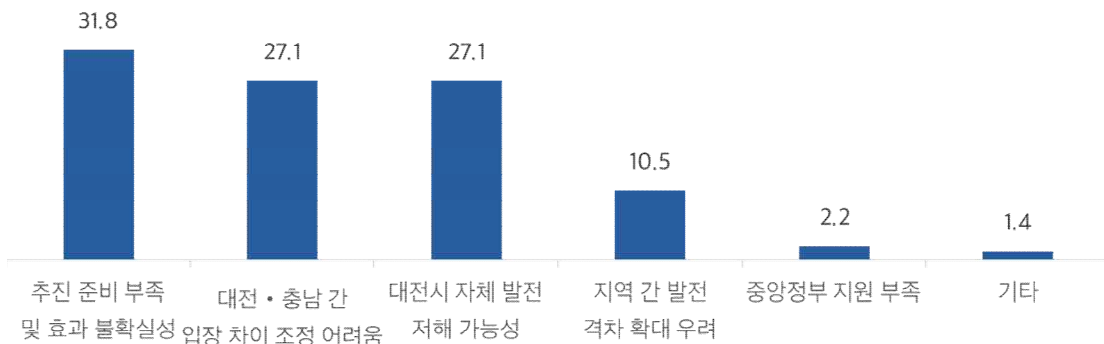
구분		긍정평가 이유(%)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서비스 확대	재정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광역 인프라 (교통· 산업벨트 등) 구축	추진 준비 및 실행 체계 강화 기대	기타
합계		30.7	6.7	33.4	27.3	0.7	1.2
성별	남성	29.8	8.1	29.8	31.7	0.0	0.6
	여성	32.0	5.4	37.4	22.4	1.4	1.4
연령	20대	28.9	10.5	44.7	13.2	2.6	0.0
	30대	24.2	3.0	39.4	33.3	0.0	0.0
	40대	29.3	7.3	26.8	34.1	0.0	2.4
	50대	27.1	5.1	39.0	28.8	0.0	0.0
	60대 이상	34.8	7.2	27.5	27.5	0.7	2.2
지역	동구	20.8	13.2	34.0	26.4	0.0	5.7
	중구	29.2	2.1	41.7	27.1	0.0	0.0
	서구	33.3	6.7	33.3	23.8	1.9	1.0
	유성구	28.4	5.4	27.0	39.2	0.0	0.0
	대덕구	44.8	3.4	37.9	13.8	0.0	0.0
거주 기간	1년 미만	20.0	20.0	0.0	60.0	0.0	0.0
	1~5년	25.0	10.7	35.7	28.6	0.0	0.0
	6~10년	15.6	12.5	25.0	40.6	0.0	6.3
	11년 이상	34.2	4.9	35.0	24.7	0.8	0.4

다 부정평가 이유

-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질문에, 추진 준비 부족 및 효과 불확실성 31.8%, 대전·충남 간 입장 차이 조정 어려움 27.1%, 대전시 자체 발전 저해 가능성 27.1%, 지역 간 발전 격차 확대 우려 10.5%, 중앙정부 지원 부족 2.2%, 기타 1.4% 순으로 나타남.

부정평가 이유

[Base=행정통합에 대한 기본평가 '부정' 응답자, n=277, 단위: %]



- 성별로 보면, 남성(32.6%)과 여성(30.9%) 모두 ‘추진 준비 부족 및 효과 불확실성’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50대(38.2%)와 60대 이상(34.8%), 20대(34.0%)는 ‘추진 준비 부족 및 효과 불확실성’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30대는 ‘대전·충남 간 입장 차이 조정 어려움’과 ‘대전시 자체 발전 저해 가능성’이 각각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40대는 ‘대전시 자체 발전 저해 가능성’(27.7%)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보면, 동구는 ‘추진 준비 부족 및 효과 불확실성’(42.9%)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유성구는 ‘대전·충남 간 입장 차이 조정 어려움’(36.8%)을 가장 높게 꼽음. 서구는 ‘대전시 자체 발전 저해 가능성’과 ‘추진 준비 부족 및 효과 불확실성’이 각각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는 ‘지역 간 발전 격차 확대 우려’ 응답이 28.9%로 타 자치구 대비 현저히 높게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보면,

1~5년 거주자는 ‘대전·충남 간 입장차이 조정 어려움’ (40.9%)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1년 미만(40.0%), 6~10년(38.9%), 11년 이상(30.9%) 거주자는 모두 ‘추진 준비 부족 및 효과 불확실성’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구분		부정평가 이유(%)					
		대전충남 간 입장 차이 조정 어려움	중앙정부 지원 부족	지역 간 발전 격차 확대 우려	대전시 자체 발전 저해 가능성	추진 준비 부족 및 효과 불확실성	기타
합계		27.1	2.2	10.5	27.1	31.8	1.4
성별	남성	28.4	2.8	7.1	27.0	32.6	2.1
	여성	25.7	1.5	14.0	27.2	30.9	0.7
연령	20대	29.8	0.0	6.4	27.7	34.0	2.1
	30대	31.7	5.0	1.7	31.7	30.0	0.0
	40대	23.4	4.3	19.1	27.7	21.3	4.3
	50대	23.6	1.8	5.5	30.9	38.2	0.0
	60대 이상	25.8	0.0	19.7	18.2	34.8	1.5
지역	동구	20.0	2.9	5.7	28.6	42.9	0.0
	중구	22.2	2.2	28.9	22.2	24.4	0.0
	서구	21.4	1.2	7.1	33.3	33.3	3.6
	유성구	36.8	2.6	7.9	22.4	28.9	1.3
	대덕구	29.7	2.7	5.4	27.0	35.1	0.0
거주기간	1년 미만	20.0	20.0	0.0	20.0	40.0	0.0
	1~5년	40.9	0.0	4.5	18.2	36.4	0.0
	6~10년	22.2	5.6	16.7	16.7	38.9	0.0
	11년 이상	25.8	2.1	10.7	28.8	30.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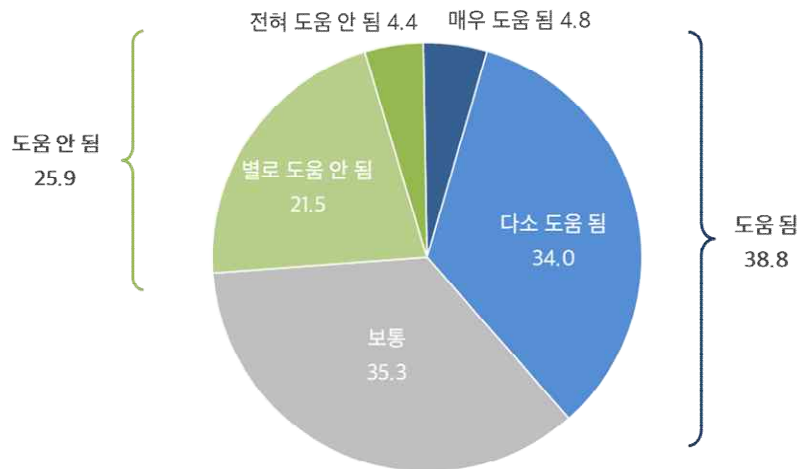
3.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가-1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도움 됨 38.8%(다소 도움 됨 34.0% + 매우 도움 됨 4.8%),
 보통 35.3%,
 도움 안 됨 25.9%(별로 도움 안 됨 21.5% + 전혀 도움 안 됨 4.4%) 순으로 나타남.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

[n=1,000, 단위: %]



- 성별로 보면,
 남성(41.5%)이 여성(36.2%)보다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여성은 ‘보통’ (37.6%)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47.4%)에서 ‘도움 됨’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50대(38.5%), 40대(36.9%), 20대(36.2%) 순으로 나타남. 반면 30대는 유일하게 ‘도움 안 됨’ (34.8%) 부정 응답이 ‘도움 됨’ (27.7%) 긍정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보면,
 유성구(41.2%), 동구(40.8%), 중구(40.3%), 서구(37.8%), 대덕구(32.5%) 순으로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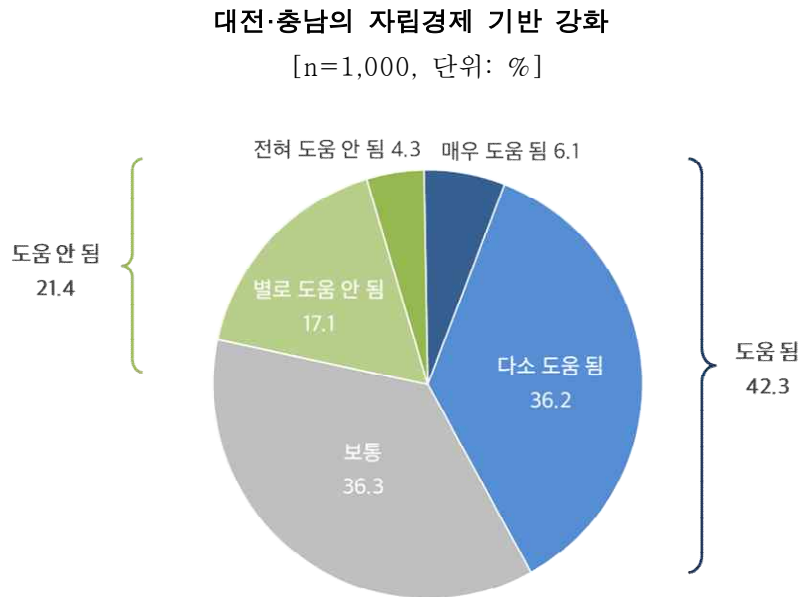
○ 거주기간별로 보면,

6~10년 거주자(43.0%)가 ‘도움 됨’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11년 이상(38.8%), 1~5년(36.7%), 1년 미만(25.0%) 순으로 나타남.

구분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도움 됨 (a+b)	도움 안 됨 (c+d)
		매우 도움 됨 (a)	다소 도움 됨 (b)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c)	전혀 도움 안 됨 (d)			
합계		4.8	34.0	35.3	21.5	4.4	38.8	25.9	
성별	남성	6.9	34.7	33.1	19.2	6.3	41.5	25.4	
	여성	2.8	33.5	37.6	23.8	2.4	36.2	26.1	
연령	20대	4.0	32.2	33.3	24.3	6.2	36.2	30.5	
	30대	1.9	25.8	37.4	25.2	9.7	27.7	34.8	
	40대	3.6	33.3	39.3	20.8	3.0	36.9	23.8	
	50대	5.1	33.3	33.3	25.1	3.1	38.5	28.2	
	60대 이상	7.5	39.9	34.1	15.9	2.6	47.4	18.5	
지역	동구	5.1	35.7	37.6	16.6	5.1	40.8	21.7	
	중구	8.8	31.4	36.5	21.4	1.9	40.3	23.3	
	서구	5.0	32.8	35.3	22.8	4.1	37.8	26.9	
	유성구	3.3	38.0	31.4	20.8	6.5	41.2	27.3	
	대덕구	1.7	30.8	38.3	26.7	2.5	32.5	29.2	
거주 기간	1년 미만	0.0	25.0	50.0	15.0	10.0	25.0	25.0	
	1~5년	4.1	32.7	35.7	24.5	3.1	36.7	27.6	
	6~10년	4.7	38.4	37.2	16.3	3.5	43.0	19.8	
	11년 이상	5.0	33.8	34.7	21.8	4.6	38.8	26.4	

가-2 대전·충남의 자립경제 기반 강화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대전·충남의 자립경제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 도움 됨 42.3%(다소 도움 됨 36.2% + 매우 도움 됨 6.1%),
 - 보통 36.3%,
 - 도움 안 됨 21.4%(별로 도움 안 됨 17.1% + 전혀 도움 안 됨 4.3%)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 남성(44.6%)과 여성(40.1%) 모두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 60대 이상(47.7%)에서 ‘도움 됨’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44.4%), 40대(42.3%), 20대(41.8%)가 그 뒤를 이어 전반적으로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임. 반면 30대는 ‘도움 됨’ 응답이 30.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보면,
 - ‘도움 됨’ 응답은 동구(46.2%), 유성구(46.1%), 서구(43.1%), 중구(40.9%),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반면 대덕구는 ‘도움 됨’ 응답이 29.2%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보면,
 - 1~5년 거주자(51.0%)의 ‘도움 됨’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6~10년(44.2%),

11년 이상(41.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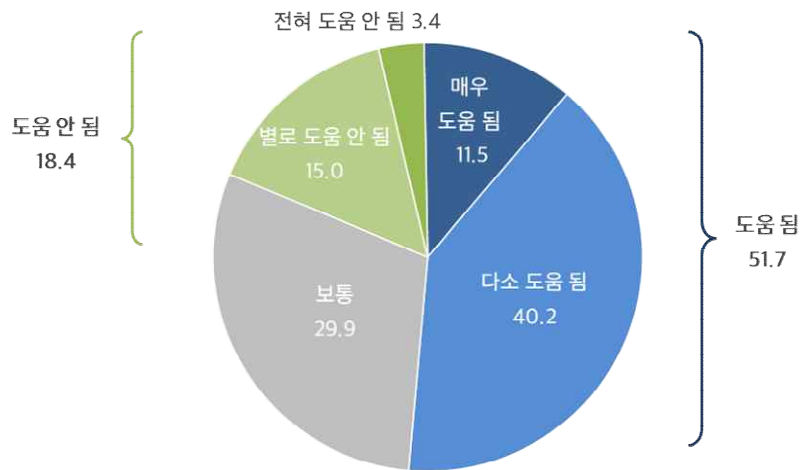
구분		대전·충남의 자립경제 기반 강화(%)						도움 됨 (a+b)	도움 안 됨 (c+d)
		매우 도움 됨 (a)	다소 도움 됨 (b)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c)	전혀 도움 안 됨 (d)			
합계		6.1	36.2	36.3	17.1	4.3	42.3	21.4	
성별	남성	8.1	36.5	32.3	16.5	6.7	44.6	23.2	
	여성	4.2	35.9	40.3	17.5	2.2	40.1	19.6	
연령	20대	5.1	36.7	27.7	23.2	7.3	41.8	30.5	
	30대	3.9	26.5	41.3	22.6	5.8	30.3	28.4	
	40대	4.2	38.1	40.5	14.3	3.0	42.3	17.3	
	50대	6.6	37.8	36.7	15.8	3.1	44.4	18.9	
	60대 이상	8.8	38.9	35.9	13.1	3.3	47.7	16.3	
지역	동구	9.0	37.2	35.9	12.8	5.1	46.2	17.9	
	중구	5.7	35.2	35.8	20.8	2.5	40.9	23.3	
	서구	6.9	36.3	36.9	14.1	5.9	43.1	20.0	
	유성구	4.5	41.6	33.5	16.3	4.1	46.1	20.4	
	대덕구	4.2	25.0	41.7	26.7	2.5	29.2	29.2	
거주 기간	1년 미만	5.3	21.1	57.9	5.3	10.5	26.3	15.8	
	1~5년	4.2	46.9	26.0	21.9	1.0	51.0	22.9	
	6~10년	4.7	39.5	37.2	14.0	4.7	44.2	18.6	
	11년 이상	6.5	34.9	36.9	17.1	4.5	41.5	21.6	

가-3 대전·충남 간 생활·경제권 통합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대전·충남 간 생활·경제권 통합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도움 됨 51.7%(다소 도움 됨 40.2% + 매우 도움 됨 11.5%),
 보통 29.9%,
 도움 안 됨 18.4%(별로 도움 안 됨 15.0% + 전혀 도움 안 됨 3.4%) 순으로 나타남.

대전·충남 간 생활·경제권 통합

[n=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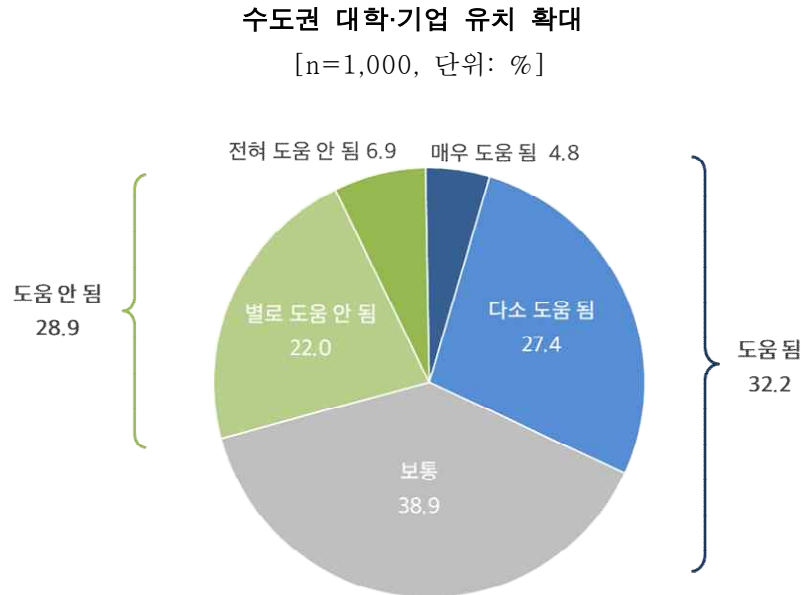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2.3%)과 여성(51.1%) 모두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60.3%)에서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50대(52.8%), 20대(48.9%), 40대(48.2%) 순으로 나타남. 반면 30대는 ‘도움 됨’ 응답이 40.4%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며, ‘보통’ (39.1%)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보면,
 ‘도움 됨’ 응답은 유성구(55.9%), 동구(54.8%), 중구(53.8%), 서구(50.0%) 순으로 4개 자치구 모두 높은 응답률을 보임. 반면 대덕구는 ‘도움 됨’ 응답이 40.8%로 가장 낮았으며, ‘도움 안 됨’ 응답은 25.0%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보면,
 6~10년 거주자(58.1%)와 1~5년 거주자(57.7%)의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11년 이상(50.8%) 순으로 나타남. 1년 미만 거주자는 ‘보통’ 응답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구분		대전·충남 간 생활·경제권 통합(%)						도움 됨 (a+b)	도움 안 됨 (c+d)
		매우 도움 됨 (a)	다소 도움 됨 (b)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c)	전혀 도움 안 됨 (d)			
합계		11.5	40.2	29.9	15.0	3.4	51.7	18.4	
성별	남성	14.3	38.0	27.8	15.3	4.6	52.3	19.9	
	여성	8.9	42.2	31.9	14.9	2.2	51.1	17.0	
연령	20대	10.8	38.1	27.3	21.0	2.8	48.9	23.9	
	30대	5.8	34.6	39.1	12.8	7.7	40.4	20.5	
	40대	7.7	40.5	32.7	16.1	3.0	48.2	19.0	
	50대	13.3	39.5	28.7	15.4	3.1	52.8	18.5	
	60대 이상	16.3	44.0	25.7	12.1	2.0	60.3	14.0	
지역	동구	16.1	38.7	29.7	12.9	2.6	54.8	15.5	
	중구	13.1	40.6	29.4	15.0	1.9	53.8	16.9	
	서구	12.5	37.5	30.9	14.4	4.7	50.0	19.1	
	유성구	9.8	46.1	26.5	13.1	4.5	55.9	17.6	
	대덕구	5.0	35.8	34.2	24.2	0.8	40.8	25.0	
거주 기간	1년 미만	5.3	31.6	47.4	5.3	10.5	36.8	15.8	
	1~5년	8.2	49.5	26.8	11.3	4.1	57.7	15.5	
	6~10년	11.6	46.5	31.4	8.1	2.3	58.1	10.5	
	11년 이상	12.2	38.6	29.6	16.4	3.3	50.8	19.7	

가-4 수도권 대학·기업 유치 확대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수도권 대학·기업 유치 확대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 보통 38.9%,
 - 도움 됨 32.2%(다소 도움 됨 27.4% + 매우 도움 됨 4.8%),
 - 도움 안 됨 28.9%(별로 도움 안 됨 22.0% + 전혀 도움 안 됨 6.9%)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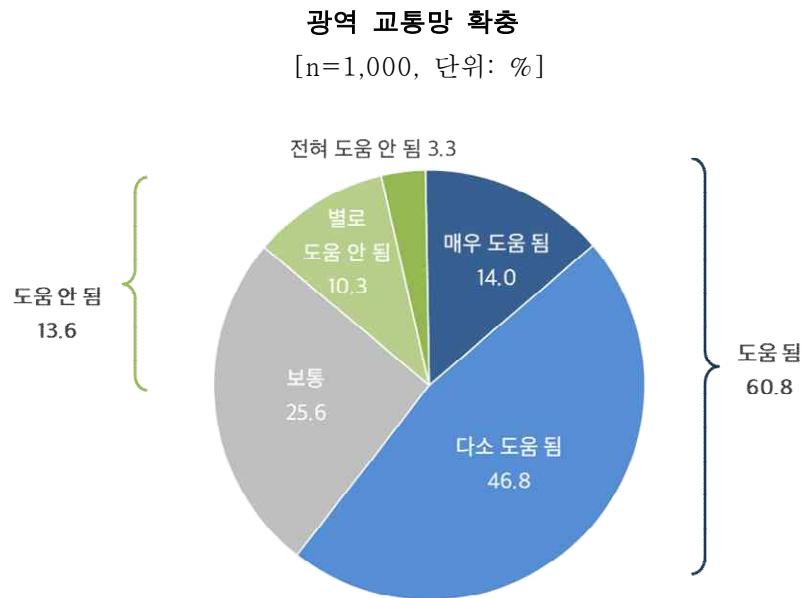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 남녀 모두 ‘보통’ 응답(여성 40.2%, 남성 37.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움 됨’ 응답률은 여성(32.9%)과 남성(31.5%)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연령별로 보면,
 - ‘도움 됨’ 응답은 60대 이상(41.8%)과 40대(32.1%)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도움 안 됨’ 응답은 30대(39.6%), 50대(33.7%), 20대(33.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보면,
 - ‘도움 됨’ 응답은 동구(40.4%), 유성구(33.9%), 중구(31.6%)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대덕구는 ‘도움 안 됨’ 응답이 34.7%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으며, ‘도움 됨’ (28.9%) 응답보다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보면,
 - 6~10년 거주자(38.4%)와 11년 이상 거주자(31.9%)는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

타남. 반면 1~5년 거주자(34.4%)와 1년 미만 거주자(25.0%)는 ‘도움 안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구분		수도권 대학·기업 유치 확대(%)						
		매우 도움 됨 (a)	다소 도움 됨 (b)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c)	전혀 도움 안 됨 (d)	도움 됨 (a+b)	도움 안 됨 (c+d)
합계		4.8	27.4	38.9	22.0	6.9	32.2	28.9
성별	남성	5.0	26.4	37.7	22.0	8.9	31.5	30.8
	여성	4.6	28.3	40.2	22.0	5.0	32.9	26.9
연령	20대	2.3	26.0	38.4	23.2	10.2	28.2	33.3
	30대	3.9	17.5	39.0	27.3	12.3	21.4	39.6
	40대	3.6	28.6	41.7	20.8	5.4	32.1	26.2
	50대	7.1	21.9	37.2	27.6	6.1	29.1	33.7
	60대 이상	5.9	35.9	38.6	16.0	3.6	41.8	19.6
지역	동구	8.3	32.1	32.1	20.5	7.1	40.4	27.6
	중구	3.2	28.5	41.1	19.0	8.2	31.6	27.2
	서구	6.2	22.1	44.5	20.2	6.9	28.3	27.1
	유성구	2.9	31.0	35.5	23.3	7.3	33.9	30.6
	대덕구	2.5	26.4	36.4	29.8	5.0	28.9	34.7
거주 기간	1년 미만	5.0	15.0	55.0	15.0	10.0	20.0	25.0
	1~5년	3.1	28.1	34.4	25.0	9.4	31.3	34.4
	6~10년	7.0	31.4	31.4	22.1	8.1	38.4	30.2
	11년 이상	4.8	27.1	39.9	21.8	6.4	31.9	28.2

가-5 광역 교통망 확충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광역 교통망 확충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도움 됨 60.8%(다소 도움 됨 46.8% + 매우 도움 됨 14.0%), 보통 25.6%, 도움 안 됨 13.6%(별로 도움 안 됨 10.3% + 전혀 도움 안 됨 3.3%)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62.5%)과 여성(58.9%) 모두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64.8%)과 50대(64.1%)는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40대(59.9%), 20대(56.8%), 30대(53.5%)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보면, 동구(67.3%), 유성구(62.0%), 서구(60.6%), 중구(58.9%)는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반면 대덕구(53.3%)는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도움 안 됨’ (20.8%) 응답률이 다른 자치구 대비 높게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보면, 6~10년 거주자(70.9%), 1~5년 거주자(66.0%), 11년 이상 거주자(59.5%), 1년 미만 거주자(42.1%) 순으로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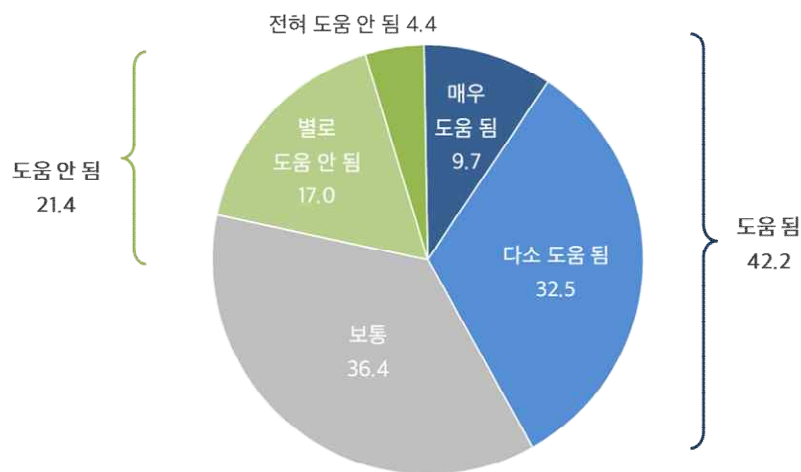
구분		광역 교통망 확충(%)						도움 됨 (a+b)	도움 안 됨 (c+d)
		매우 도움 됨 (a)	다소 도움 됨 (b)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c)	전혀 도움 안 됨 (d)			
합계		14.0	46.8	25.6	10.3	3.3	60.8	13.6	
성별	남성	14.7	47.8	23.0	9.9	4.6	62.5	14.5	
	여성	13.1	45.8	28.2	10.9	2.0	58.9	12.9	
연령	20대	13.6	43.2	29.5	9.7	4.0	56.8	13.6	
	30대	11.0	42.6	29.7	9.7	7.1	53.5	16.8	
	40대	13.2	46.7	25.7	12.0	2.4	59.9	14.4	
	50대	12.8	51.3	20.5	11.8	3.6	64.1	15.4	
	60대 이상	16.6	48.2	24.1	9.4	1.6	64.8	11.1	
지역	동구	20.5	46.8	24.4	4.5	3.8	67.3	8.3	
	중구	12.7	46.2	31.6	8.2	1.3	58.9	9.5	
	서구	12.2	48.4	24.7	12.5	2.2	60.6	14.7	
	유성구	13.9	48.2	23.7	9.8	4.5	62.0	14.3	
	대덕구	12.5	40.8	25.8	15.8	5.0	53.3	20.8	
거주 기간	1년 미만	10.5	31.6	52.6	0.0	5.3	42.1	5.3	
	1~5년	17.5	48.5	23.7	7.2	3.1	66.0	10.3	
	6~10년	16.3	54.7	22.1	5.8	1.2	70.9	7.0	
	11년 이상	13.4	46.1	25.6	11.4	3.5	59.5	14.9	

가-6 세종시 행정수도와의 연계를 통한 대전의 위상 강화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세종시 행정수도와의 연계를 통한 대전의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도움 됨 42.2%(다소 도움 됨 32.5% + 매우 도움 됨 9.7%),
 보통 36.4%,
 도움 안 됨 21.4%(별로 도움 안 됨 17.0% + 전혀 도움 안 됨 4.4%) 순으로 나타남.

세종시 행정수도와의 연계를 통한 대전의 위상 강화

[n=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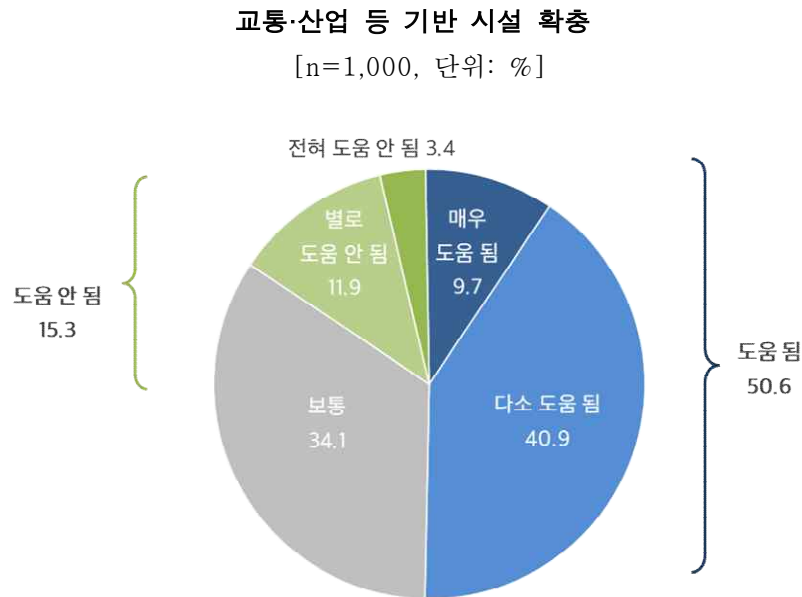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42.5%)과 여성(41.9%) 모두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49.5%), 40대(45.8%), 50대(44.1%)는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반면 30대와 20대는 ‘도움 됨’ 응답이 각각 33.1%, 32.4%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보통’ 응답(20대 43.8%, 30대 39.0%)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보면,
 동구(48.7%), 유성구(45.3%), 중구(42.7%), 서구(39.4%), 대덕구(34.2%) 순으로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보면,
 6~10년 거주자(47.7%), 11년 이상 거주자(41.9%), 1~5년 거주자(40.8%)는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반면 1년 미만 거주자는 ‘보통’ 응답이 40.0%로 가

장 높게 나타남.

구분		세종시 행정수도와의 연계를 통한 대전의 위상 강화(%)						
		매우 도움 됨 (a)	다소 도움 됨 (b)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c)	전혀 도움 안 됨 (d)	도움 됨 (a+b)	도움 안 됨 (c+d)
합계		9.7	32.5	36.4	17.0	4.4	42.2	21.4
성별	남성	11.3	31.3	36.3	15.5	5.6	42.5	21.2
	여성	8.1	33.7	36.5	18.3	3.4	41.9	21.6
연령	20대	6.3	26.1	43.8	19.3	4.5	32.4	23.9
	30대	7.8	25.3	39.0	19.5	8.4	33.1	27.9
	40대	8.9	36.9	33.3	17.3	3.6	45.8	20.8
	50대	8.2	35.9	33.8	17.9	4.1	44.1	22.1
	60대 이상	14.0	35.5	33.9	13.4	3.3	49.5	16.6
지역	동구	14.1	34.6	35.9	10.9	4.5	48.7	15.4
	중구	10.2	32.5	39.5	14.6	3.2	42.7	17.8
	서구	9.7	29.7	37.2	18.8	4.7	39.4	23.4
	유성구	9.4	35.9	31.8	16.7	6.1	45.3	22.9
	대덕구	4.2	30.0	40.8	22.5	2.5	34.2	25.0
거주 기간	1년 미만	10.0	25.0	40.0	20.0	5.0	35.0	25.0
	1~5년	8.2	32.7	36.7	17.3	5.1	40.8	22.4
	6~10년	10.5	37.2	37.2	11.6	3.5	47.7	15.1
	11년 이상	9.8	32.1	36.1	17.5	4.5	41.9	22.1

가-7 교통·산업 등 기반 시설 확충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교통·산업 등 기반 시설 확충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도움 됨 50.6%(다소 도움 됨 40.9% + 매우 도움 됨 9.7%),
 보통 34.1%,
 도움 안 됨 15.3%(별로 도움 안 됨 11.9% + 전혀 도움 안 됨 3.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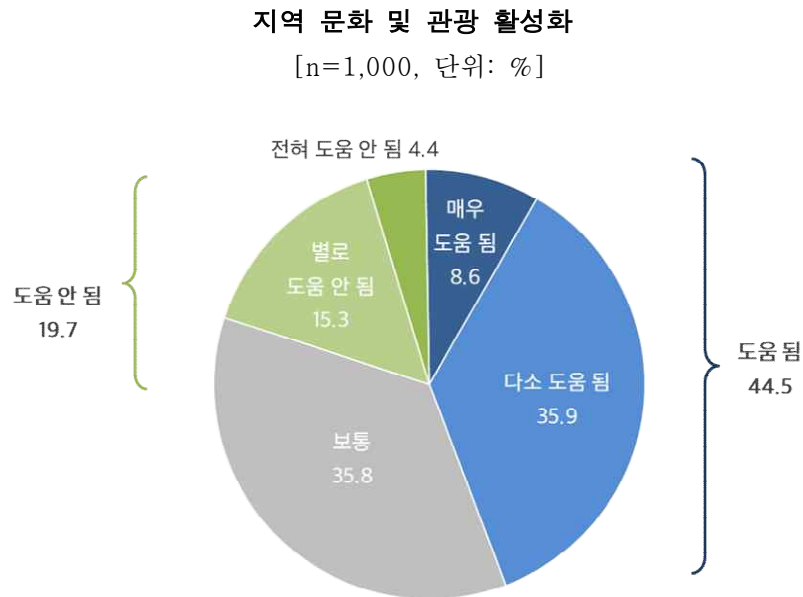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0.9%)과 여성(50.2%) 모두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56.9%), 50대(53.6%), 40대(52.4%)는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반면 30대는 ‘보통’ 응답이 43.2%로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도움 됨’ (39.4%)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보면,
 유성구(57.1%), 중구(55.3%), 동구(53.8%), 서구(46.4%)는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반면 대덕구는 ‘보통’ 응답이 37.8%로 ‘도움 됨’ (37.0%) 응답과 비슷하게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보면,
 6~10년 거주자(61.6%), 1~5년 거주자(59.2%), 11년 이상 거주자(48.4%), 1년 미만 거

주자(45.0%) 순으로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구분		교통·산업 등 기반 시설 확충(%)						
		매우 도움 됨 (a)	다소 도움 됨 (b)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c)	전혀 도움 안 됨 (d)	도움 됨 (a+b)	도움 안 됨 (c+d)
합계		9.7	40.9	34.1	11.9	3.4	50.6	15.3
성별	남성	9.3	41.6	33.1	11.9	4.0	50.9	16.0
	여성	10.1	40.1	35.1	11.9	2.8	50.2	14.7
연령	20대	6.8	37.9	36.7	14.7	4.0	44.6	18.6
	30대	7.7	31.6	43.2	10.3	7.1	39.4	17.4
	40대	8.9	43.5	34.5	11.3	1.8	52.4	13.1
	50대	7.7	45.9	33.0	11.9	1.5	53.6	13.4
	60대 이상	14.4	42.5	28.4	11.4	3.3	56.9	14.7
지역	동구	15.4	38.5	32.7	9.6	3.8	53.8	13.5
	중구	9.4	45.9	36.5	6.9	1.3	55.3	8.2
	서구	9.7	36.8	36.8	12.8	4.0	46.4	16.8
	유성구	9.4	47.8	28.6	10.2	4.1	57.1	14.3
	대덕구	2.5	34.5	37.8	22.7	2.5	37.0	25.2
거주 기간	1년 미만	15.0	30.0	40.0	10.0	5.0	45.0	15.0
	1~5년	9.2	50.0	31.6	6.1	3.1	59.2	9.2
	6~10년	11.6	50.0	30.2	7.0	1.2	61.6	8.1
	11년 이상	9.4	39.0	34.6	13.3	3.6	48.4	16.9

가-8 지역 문화 및 관광 활성화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역 문화 및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도움 됨 44.5%(다소 도움 됨 35.9% + 매우 도움 됨 8.6%),
 보통 35.8%,
 도움 안 됨 19.7%(별로 도움 안 됨 15.3% + 전혀 도움 안 됨 4.4%)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46.5%)과 남성(42.6%) 모두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50.5%), 40대(46.7%), 50대(44.4%), 30대(41.3%)는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반면 20대는 ‘보통’ 응답이 36.4%로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도움 됨’ (35.8%)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보면,
 중구(49.1%), 유성구(46.7%), 서구(46.6%), 동구(44.2%)는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반면 대덕구는 ‘도움 됨’ 응답이 29.4%로 가장 낮았으며, ‘보통’ 응답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보면,
 6~10년 거주자(48.8%), 11년 이상 거주자(45.0%), 1~5년 거주자(39.6%)는 ‘도움

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구분		지역 문화 및 관광 활성화(%)						도움 됨 (a+b)	도움 안 됨 (c+d)
		매우 도움 됨 (a)	다소 도움 됨 (b)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c)	전혀 도움 안 됨 (d)			
합계		8.6	35.9	35.8	15.3	4.4	44.5	19.7	
성별	남성	9.1	33.5	35.4	16.0	6.1	42.6	22.0	
	여성	8.2	38.4	36.2	14.5	2.8	46.5	17.3	
연령	20대	7.4	28.4	36.4	20.5	7.4	35.8	27.8	
	30대	7.7	33.5	32.9	18.1	7.7	41.3	25.8	
	40대	6.0	40.7	35.9	13.8	3.6	46.7	17.4	
	50대	6.1	38.3	37.2	14.8	3.6	44.4	18.4	
	60대 이상	13.0	37.5	35.5	11.7	2.3	50.5	14.0	
지역	동구	13.5	30.8	37.8	14.1	3.8	44.2	17.9	
	중구	6.9	42.1	30.2	15.7	5.0	49.1	20.8	
	서구	10.6	35.9	35.6	14.7	3.1	46.6	17.8	
	유성구	5.7	41.0	33.2	13.5	6.6	46.7	20.1	
	대덕구	5.0	24.4	46.2	21.0	3.4	29.4	24.4	
거주 기간	1년 미만	5.0	25.0	50.0	10.0	10.0	30.0	20.0	
	1~5년	4.2	35.4	38.5	15.6	6.3	39.6	21.9	
	6~10년	14.0	34.9	38.4	10.5	2.3	48.8	12.8	
	11년 이상	8.6	36.3	34.8	15.8	4.4	45.0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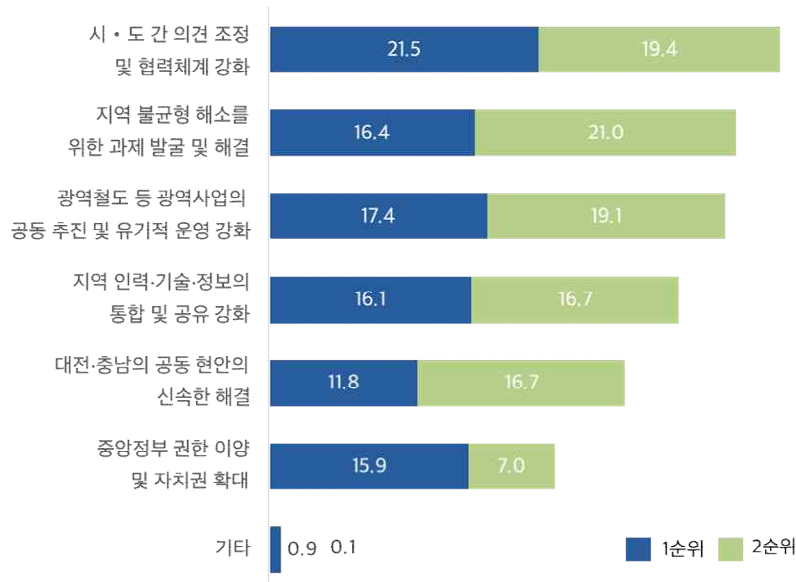
나 우선 추진과제

○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후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 1순위 응답에서는 시·도 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강화(21.5%), 광역철도 등 광역사업의 공동 추진 및 유기적 운영 강화(17.4%),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해결(16.4%), 지역 인력·기술·정보의 통합 및 공유 강화(16.1%),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자치권 확대(15.9%), 대전·충남의 공동 현안의 신속한 해결(11.8%), 기타(0.9%) 순으로 나타남.

2순위 응답에서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해결(21.0%), 시·도 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강화(19.4%), 광역철도 등 광역사업의 공동 추진 및 유기적 운영 강화(19.1%), 지역 인력·기술·정보의 통합 및 공유 강화(16.7%), 대전·충남의 공동 현안의 신속한 해결(16.7%),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자치권 확대(7.0%), 기타(0.1%) 순으로 나타남.

우선 추진과제

[n=1,000, case=2,000, 1·2순위, 단위: %]



[1+2순위 합산 집단별 응답 결과]

○ 전체적으로 보면, ‘시·도 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강화(40.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해결(37.4%)’, ‘광역철도 등 광역사업의 공동 추진 및 유기적 운영 강화(36.5%)’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함.

- 성별로 보면,
여성(43.5%)은 ‘시·도 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강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반면 남성(38.9%)은 ‘광역철도 등 광역사업의 공동 추진 및 유기적 운영 강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50대(40.6%)와 60대 이상(42.6%)은 ‘시·도 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강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20대(47.1%)와 40대(42.3%)는 ‘광역철도 등 광역사업의 공동 추진 및 유기적 운영 강화’ 응답률이 높았고, 30대(42.7%)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해결’ 응답률이 제일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보면,
중구(45.7%), 대덕구(43.5%), 서구(39.8%)는 ‘시·도 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강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동구(44.6%)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해결’을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유성구(42.1%)는 ‘광역철도 등 광역사업의 공동 추진 및 유기적 운영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해 지역별 현안에 따른 차이가 뚜렷함.
- 거주기간별로 보면,
1~5년 거주자(47.7%)와 11년 이상 거주자(40.1%)는 ‘시·도 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강화’를 가장 높게 응답함. 1년 미만 거주자(46.6%)와 6~10년 거주자(45.5%)는 ‘광역철도 등 광역사업의 공동 추진 및 유기적 운영 강화’ 응답률이 제일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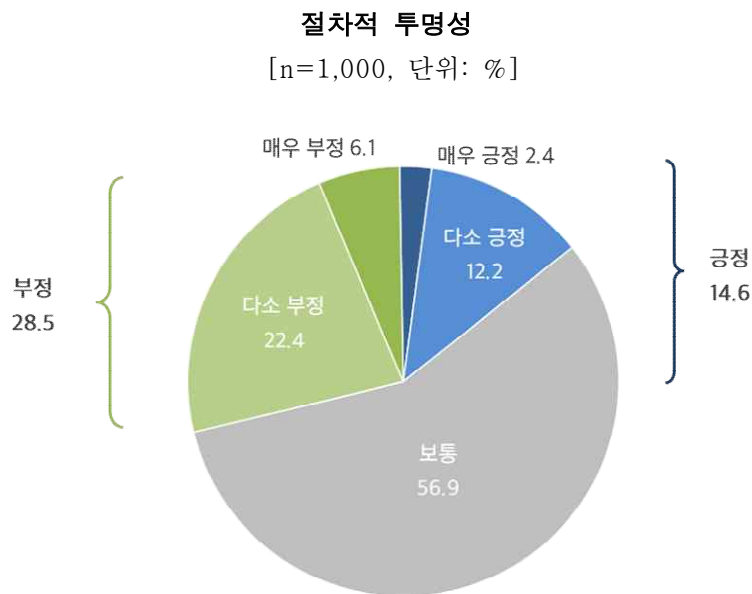
구분	우선 추진과제 1순위(%)							기타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자치권 확대	지역 인력·기술 ·정보의 통합 및 공유 강화	사도 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강화	광역철도 등 광역사업의 공동 추진 및 유기적 운영 강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해결	대전·충남 의 공동 현안의 신속한 해결		
합계	15.9	16.1	21.5	17.4	16.4	11.8	0.9	
성별	남성	17.9	15.9	21.0	17.1	15.7	10.7	1.6
	여성	13.9	16.5	22.0	17.7	17.1	12.7	0.2
연령	20대	13.1	16.0	21.1	24.0	13.7	10.9	1.1
	30대	8.4	20.6	23.9	18.1	20.6	8.4	0.0
	40대	12.0	16.8	18.0	20.4	17.4	13.8	1.8
	50대	15.9	17.9	20.0	17.4	16.9	11.8	0.0
	60대 이상	23.5	12.4	23.2	11.8	15.4	12.4	1.3
지역	동구	19.2	17.3	20.5	16.7	15.4	10.9	0.0
	중구	18.8	11.3	24.4	13.1	22.5	9.4	0.6
	서구	14.0	17.4	21.2	17.4	14.3	13.4	2.2
	유성구	12.7	18.0	18.8	22.0	18.4	9.8	0.4
	대덕구	20.7	14.0	24.0	14.0	11.6	15.7	0.0
거주 기간	1년 미만	15.8	15.8	15.8	21.1	5.3	15.8	10.5
	1~5년	13.4	17.5	23.7	24.7	14.4	6.2	0.0
	6~10년	11.6	14.0	29.1	25.6	14.0	4.7	1.2
	11년 이상	16.6	16.3	20.6	15.4	17.1	13.3	0.8

구분	우선 추진과제 1+2순위(%)							기타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자치권 확대	지역 인력·기술 ·정보의 통합 및 공유 강화	사도 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강화	광역철도 등 광역사업의 공동 추진 및 유기적 운영 강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해결	대전·충남 의 공동 현안의 신속한 해결		
합계	22.9	32.8	40.9	36.5	37.4	28.5	1.0	
성별	남성	26.2	32.6	38.1	38.9	35.0	27.5	1.7
	여성	19.7	33.0	43.5	34.2	39.8	29.5	0.3
연령	20대	18.4	30.2	42.7	47.1	32.3	27.6	1.7
	30대	20.9	33.4	42.5	40.8	42.7	19.7	0.0
	40대	18.5	31.8	34.4	42.3	34.4	36.9	1.7
	50대	22.6	35.5	40.6	35.3	38.3	27.5	0.0
	60대 이상	29.2	32.9	42.6	25.9	38.7	29.5	1.3
지역	동구	26.3	29.1	37.3	32.5	44.6	30.2	0.0
	중구	24.8	30.7	45.7	29.9	39.2	29.0	0.7
	서구	20.9	34.8	39.8	37.2	33.1	32.1	2.2
	유성구	20.3	35.7	40.0	42.1	36.5	24.7	0.7
	대덕구	27.0	29.5	43.5	37.1	39.1	23.7	0.0
거주 기간	1년 미만	23.8	26.0	29.4	46.6	40.0	22.2	12.0
	1~5년	21.0	37.3	47.7	42.9	31.9	19.1	0.0
	6~10년	21.0	29.4	42.5	45.5	38.4	21.4	1.9
	11년 이상	23.4	32.8	40.1	34.5	37.9	30.5	0.7

4. 통합 추진 과정 및 문제점 인식

가-1 철저적 투명성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 56.9%, 부정 28.5%(다소 부정 22.4% + 매우 부정 6.1%), 긍정 14.6%(다소 긍정 12.2% + 매우 긍정 2.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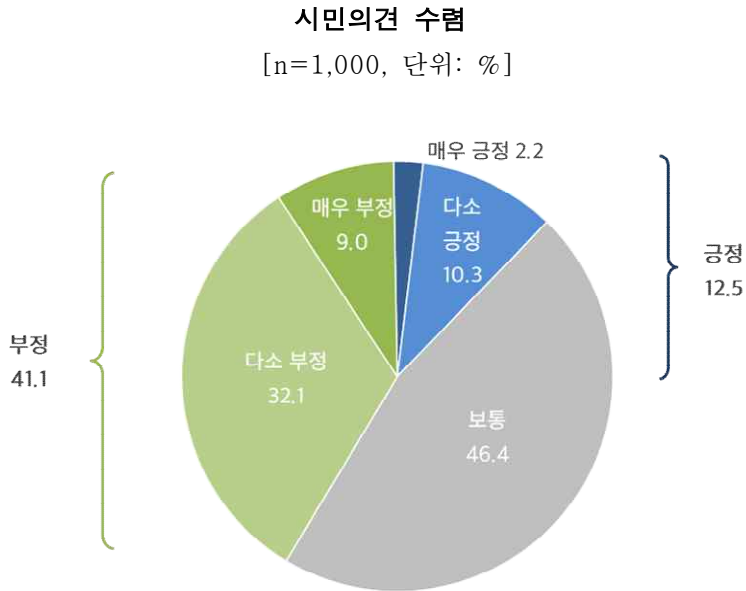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0.4%)과 여성(26.4%) 모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남성 16.7%, 여성 12.5%)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30대(37.4%)는 ‘부정’ 평가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 평가는 6.5%로 가장 낮게 나타남. 20대(29.5%), 50대(28.9%), 40대(26.5%), 60대 이상(24.1%) 역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보면, 5개 자치구 모두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남. 서구(29.6%)와 중구(29.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덕구(29.2%), 동구(28.2%), 유성구(26.1%) 순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보면, 모든 거주기간 집단에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남. ‘부정’ 응답률은 1년 미

만 거주자(30.0%), 11년 이상 거주자(28.9%), 6~10년 거주자(28.7%), 1~5년 거주자(22.9%) 순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절차적 투명성(%)						긍정 (a+b)	부정 (c+d)
		매우 긍정 (a)	다소 긍정 (b)	보통	다소 부정 (c)	매우 부정 (d)			
합계		2.4	12.2	56.9	22.4	6.1	14.6	28.5	
성별	남성	3.8	12.9	52.8	22.0	8.5	16.7	30.4	
	여성	1.0	11.5	61.0	22.7	3.8	12.5	26.4	
연령	20대	4.0	11.4	55.1	22.7	6.8	15.3	29.5	
	30대	0.6	5.8	56.1	28.4	9.0	6.5	37.4	
	40대	1.8	13.3	58.4	21.1	5.4	15.1	26.5	
	50대	1.5	13.4	56.2	23.7	5.2	14.9	28.9	
	60대 이상	3.3	14.7	58.0	18.9	5.2	17.9	24.1	
지역	동구	3.2	14.7	53.8	22.4	5.8	17.9	28.2	
	중구	1.9	8.2	60.4	25.8	3.8	10.1	29.6	
	서구	2.8	10.9	56.7	22.7	6.9	13.7	29.6	
	유성구	2.0	13.5	58.4	20.8	5.3	15.5	26.1	
	대덕구	1.7	15.8	53.3	20.0	9.2	17.5	29.2	
거주 기간	1년 미만	0.0	5.0	65.0	20.0	10.0	5.0	30.0	
	1~5년	1.0	12.5	63.5	20.8	2.1	13.5	22.9	
	6~10년	2.3	12.6	56.3	24.1	4.6	14.9	28.7	
	11년 이상	2.6	12.4	56.0	22.3	6.6	15.0	28.9	

가-2 시민의견 수렴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설명회·토론회·온라인 참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 보통 46.4%,
 - 부정 41.1%(다소 부정 32.1% + 매우 부정 9.0%),
 - 긍정 12.5%(다소 긍정 10.3% + 매우 긍정 2.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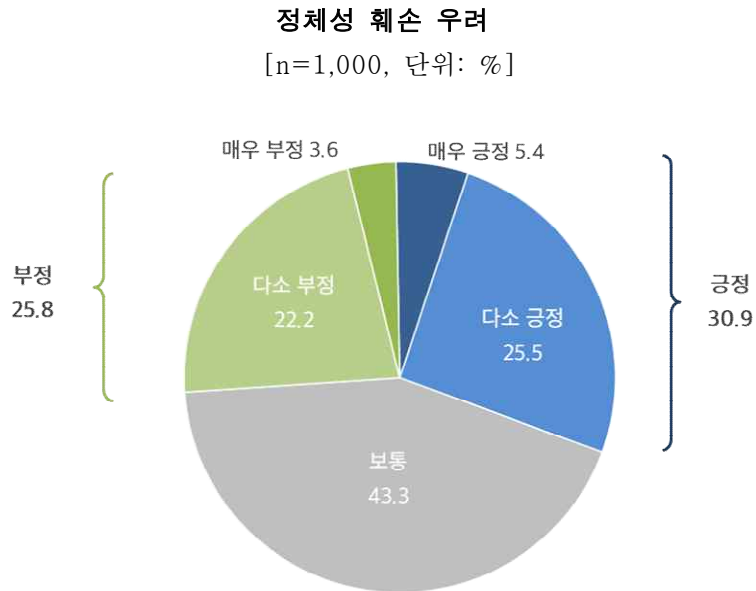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 남성(42.3%)과 여성(39.8%) 모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남성 13.7%, 여성 11.3%)보다 크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 30대(49.4%), 50대(43.3%), 40대(41.1%), 60대 이상(40.1%), 20대(32.4%) 순으로 ‘부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보면,
 - 서구(43.4%), 유성구(42.0%), 중구(39.9%), 동구(39.1%), 대덕구(36.4%) 순으로 ‘부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보면,
 - 6~10년 거주자(50.6%), 1년 미만 거주자(45.0%), 11년 이상 거주자(40.2%), 1~5년 거주자(38.1%) 순으로 ‘부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구분		시민의견 수렴(%)						긍정 (a+b)	부정 (c+d)
		매우 긍정 (a)	다소 긍정 (b)	보통	다소 부정 (c)	매우 부정 (d)			
합계		2.2	10.3	46.4	32.1	9.0	12.5	41.1	
성별	남성	3.4	10.3	44.0	31.0	11.3	13.7	42.3	
	여성	1.0	10.3	48.9	33.2	6.6	11.3	39.8	
연령	20대	3.4	9.7	54.5	26.1	6.3	13.1	32.4	
	30대	1.3	7.7	41.7	34.6	14.7	9.0	49.4	
	40대	1.8	11.9	45.2	32.7	8.3	13.7	41.1	
	50대	1.5	7.7	47.4	33.5	9.8	9.3	43.3	
	60대 이상	2.6	13.0	44.3	32.9	7.2	15.6	40.1	
지역	동구	4.5	11.5	44.9	30.1	9.0	16.0	39.1	
	중구	1.3	7.6	51.3	34.2	5.7	8.9	39.9	
	서구	1.9	8.4	46.3	33.1	10.3	10.3	43.4	
	유성구	0.8	13.5	43.7	31.0	11.0	14.3	42.0	
	대덕구	4.1	11.6	47.9	30.6	5.8	15.7	36.4	
거주 기간	1년 미만	0.0	0.0	55.0	30.0	15.0	0.0	45.0	
	1~5년	1.0	9.3	51.5	32.0	6.2	10.3	38.1	
	6~10년	2.3	18.4	28.7	43.7	6.9	20.7	50.6	
	11년 이상	2.4	9.9	47.5	30.8	9.4	12.3	40.2	

가-3 정체성 훼손 우려

-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인해 지역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 43.3%, 긍정 30.9%(다소 긍정 25.5% + 매우 긍정 5.4%), 부정 25.8%(다소 부정 22.2% + 매우 부정 3.6%)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성별로 보면, 여성은 ‘긍정’ 응답이 32.5%로 ‘부정’ 응답(22.8%)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은 ‘긍정’ (29.4%)과 ‘부정’ (28.6%)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30대(긍정 39.1%, 부정 16.7%), 20대(긍정 36.4%, 부정 26.1%), 40대(긍정 31.1%, 부정 19.2%)는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반면 50대(부정 32.8%, 긍정 30.3%)와 60대 이상(부정 29.3%, 긍정 24.1%)은 전 집단 중 유일하게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보면, 5개 자치구 모두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남. 서구(32.1%), 대덕구(31.7%), 중구(30.8%), 유성구(30.7%)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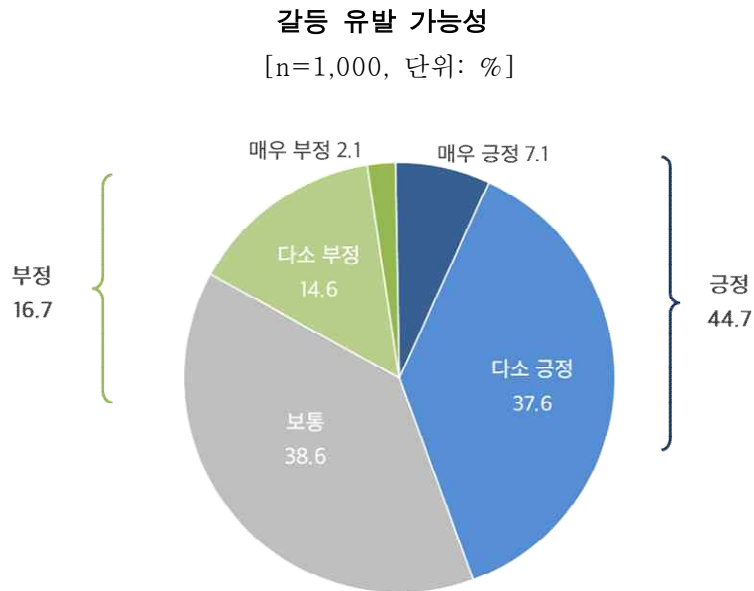
○ 거주기간별로 보면,

모든 거주기간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남. 구체적으로 11년 이상(긍정 31.3%, 부정 26.4%), 1~5년(긍정 30.2%, 부정 28.1%), 6~10년(긍정 28.2%, 부정 18.8%), 1년 미만(긍정 26.3%, 부정 15.8%) 순으로 나타남.

구분		정체성 훼손 우려(%)						긍정 (a+b)	부정 (c+d)
		매우 긍정 (a)	다소 긍정 (b)	보통	다소 부정 (c)	매우 부정 (d)			
합계		5.4	25.5	43.3	22.2	3.6	30.9	25.8	
성별	남성	6.7	22.8	41.9	23.4	5.2	29.4	28.6	
	여성	4.2	28.4	44.6	21.0	1.8	32.5	22.8	
연령	20대	8.5	27.8	37.5	21.6	4.5	36.4	26.1	
	30대	9.6	29.5	44.2	14.7	1.9	39.1	16.7	
	40대	4.8	26.3	49.7	16.2	3.0	31.1	19.2	
	50대	3.1	27.2	36.9	29.7	3.1	30.3	32.8	
	60대 이상	3.6	20.5	46.6	24.8	4.6	24.1	29.3	
지역	동구	7.7	20.5	46.2	21.2	4.5	28.2	25.6	
	중구	2.5	28.3	44.7	18.2	6.3	30.8	24.5	
	서구	5.3	26.8	41.1	23.4	3.4	32.1	26.8	
	유성구	5.3	25.4	42.6	24.6	2.0	30.7	26.6	
	대덕구	5.8	25.8	45.0	20.8	2.5	31.7	23.3	
거주기간	1년 미만	10.5	15.8	57.9	10.5	5.3	26.3	15.8	
	1~5년	3.1	27.1	41.7	25.0	3.1	30.2	28.1	
	6~10년	4.7	23.5	52.9	16.5	2.4	28.2	18.8	
	11년 이상	5.5	25.8	42.2	22.7	3.8	31.3	26.4	

가-4 갈등 유발 가능성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어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 44.7%(다소 긍정 37.6% + 매우 긍정 7.1%),
 보통 38.6%,
 부정 16.7%(다소 부정 14.6% + 매우 부정 2.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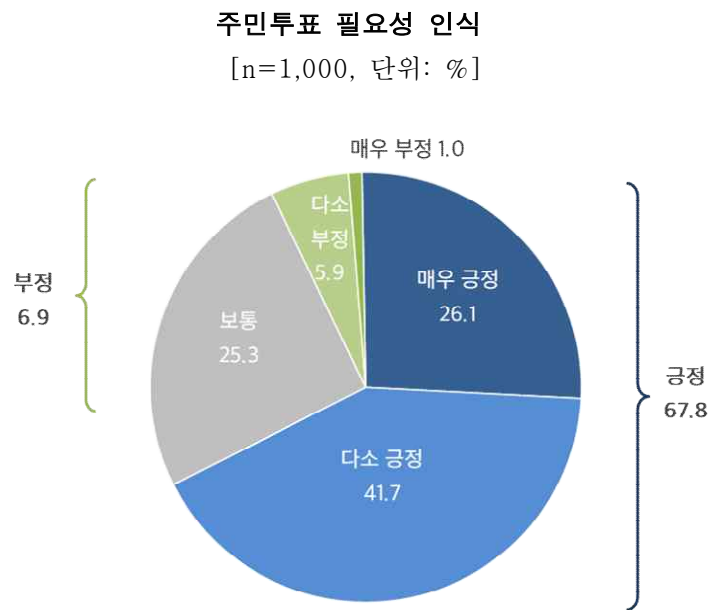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46.4%)과 여성(43.1%) 모두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48.2%), 40대(46.1%), 30대(45.2%), 50대(43.1%), 20대(38.6%) 순으로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보면,
 유성구(49.6%), 중구(47.8%), 동구(43.2%), 서구(41.9%), 대덕구(40.8%) 순으로 5개 자치구 모두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보면,
 1~5년 거주자(46.9%), 11년 이상 거주자(44.9%), 6~10년 거주자(43.0%), 1년 미만 거주자(31.6%) 순으로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구분		갈등 유발 가능성(%)						긍정 (a+b)	부정 (c+d)
		매우 긍정 (a)	다소 긍정 (b)	보통	다소 부정 (c)	매우 부정 (d)			
합계		7.1	37.6	38.6	14.6	2.1	44.7	16.7	
성별	남성	9.5	36.9	35.3	15.3	3.0	46.4	18.3	
	여성	4.8	38.3	41.7	13.9	1.4	43.1	15.3	
연령	20대	9.1	29.5	39.2	17.0	5.1	38.6	22.2	
	30대	12.3	32.9	43.9	9.7	1.3	45.2	11.0	
	40대	4.8	41.3	39.5	13.2	1.2	46.1	14.4	
	50대	6.2	36.9	36.9	18.5	1.5	43.1	20.0	
	60대 이상	5.2	43.0	36.2	13.7	2.0	48.2	15.6	
지역	동구	5.2	38.1	35.5	19.4	1.9	43.2	21.3	
	중구	6.3	41.5	41.5	8.2	2.5	47.8	10.7	
	서구	7.2	34.7	39.1	16.9	2.2	41.9	19.1	
	유성구	7.4	42.2	35.2	12.7	2.5	49.6	15.2	
	대덕구	10.0	30.8	44.2	14.2	0.8	40.8	15.0	
거주 기간	1년 미만	10.5	21.1	52.6	10.5	5.3	31.6	15.8	
	1~5년	6.3	40.6	35.4	15.6	2.1	46.9	17.7	
	6~10년	5.8	37.2	39.5	16.3	1.2	43.0	17.4	
	11년 이상	7.3	37.6	38.5	14.4	2.1	44.9	16.6	

5. 참여 의향 및 투표 행동

가 주민투표 필요성 인식

- 대전·충남 행정통합 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 67.8%(다소 긍정 41.7% + 매우 긍정 26.1%), 보통 25.3%, 부정 6.9%(다소 부정 5.9% + 매우 부정 1.0%)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68.7%)과 남성(66.9%) 모두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구체적으로 50대(71.3%), 60대 이상(71.0%), 40대(65.9%), 20대(64.6%), 30대(63.2%) 순으로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보면, 5개 자치구 모두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서구(70.0%), 유성구(69.8%), 동구(67.7%), 중구(64.6%), 대덕구(62.5%) 순으로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보면,

11년 이상 거주자(69.3%), 1~5년 거주자(63.9%), 1년 미만 거주자(63.2%), 6~10년 거주자(59.8%) 순으로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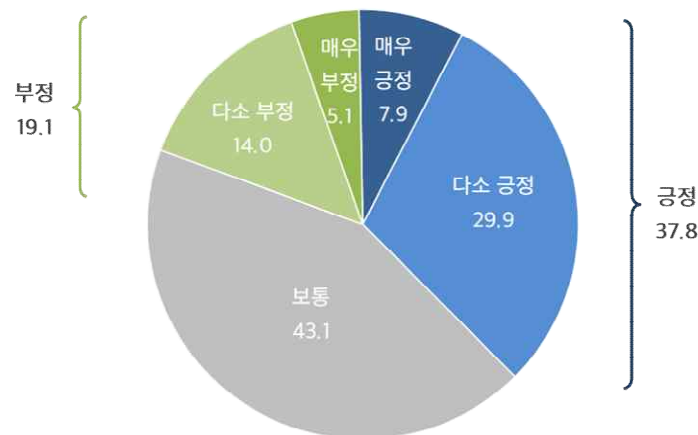
구분		주민투표 필요성 인식(%)						긍정 (a+b)	부정 (c+d)
		매우 긍정 (a)	다소 긍정 (b)	보통	다소 부정 (c)	매우 부정 (d)			
합계		26.1	41.7	25.3	5.9	1.0	67.8	6.9	
성별	남성	29.8	37.1	25.0	6.0	2.0	66.9	8.1	
	여성	22.4	46.2	25.6	5.6	0.2	68.7	5.8	
연령	20대	25.7	38.9	28.0	4.0	3.4	64.6	7.4	
	30대	21.9	41.3	31.0	5.8	0.0	63.2	5.8	
	40대	28.7	37.1	27.5	6.6	0.0	65.9	6.6	
	50대	26.7	44.6	22.6	6.2	0.0	71.3	6.2	
	60대 이상	26.7	44.3	21.5	6.2	1.3	71.0	7.5	
지역	동구	25.8	41.9	29.7	2.6	0.0	67.7	2.6	
	중구	20.9	43.7	29.1	3.8	2.5	64.6	6.3	
	서구	29.4	40.6	21.6	7.5	0.9	70.0	8.4	
	유성구	24.1	45.7	21.6	7.3	1.2	69.8	8.6	
	대덕구	29.2	33.3	32.5	5.0	0.0	62.5	5.0	
거주기간	1년 미만	31.6	31.6	36.8	0.0	0.0	63.2	0.0	
	1~5년	22.7	41.2	26.8	6.2	3.1	63.9	9.3	
	6~10년	24.1	35.6	35.6	4.6	0.0	59.8	4.6	
	11년 이상	26.6	42.7	23.6	6.1	1.0	69.3	7.2	

나 공론화 활동 참여 의향

- 앞으로 진행될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공론화 활동(설명회·토론회·온라인 의견 제출 등)에 참여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 보통 43.1%,
 - 긍정 37.8%(다소 긍정 29.9% + 매우 긍정 7.9%),
 - 부정 19.1%(다소 부정 14.0% + 매우 부정 5.1%) 순으로 나타남.

공론화 활동 참여 의향

[n=1,000, 단위: %]



- 성별로 보면,
 - 남성(40.2%)과 여성(35.4%) 모두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남성 17.9%, 여성 20.2%)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 60대 이상(44.3%), 40대(37.1%), 30대(36.1%), 50대(33.7%), 20대(33.0%) 순으로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보면,
 - 5개 자치구 모두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높음. 구체적으로 서구(40.9%), 대덕구(37.0%), 유성구(36.5%), 중구(36.1%), 동구(35.5%) 순으로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보면,
 - 6~10년(44.8%), 1~5년(37.5%), 11년 이상(37.4%) 거주자는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반면 1년 미만 거주자는 ‘부정’ 응답이 26.3%로 ‘긍정’ 응답(15.8%)보다 높게 나타남.

구분		공론화 활동 참여 의향(%)						긍정 (a+b)	부정 (c+d)
		매우 긍정 (a)	다소 긍정 (b)	보통	다소 부정 (c)	매우 부정 (d)			
합계		7.9	29.9	43.1	14.0	5.1	37.8	19.1	
성별	남성	9.7	30.6	41.9	11.5	6.4	40.2	17.9	
	여성	6.3	29.1	44.4	16.4	3.8	35.4	20.2	
연령	20대	5.7	27.3	35.8	19.9	11.4	33.0	31.3	
	30대	4.5	31.6	42.6	16.1	5.2	36.1	21.3	
	40대	10.2	26.9	47.3	10.2	5.4	37.1	15.6	
	50대	7.1	26.5	48.0	15.3	3.1	33.7	18.4	
	60대 이상	10.1	34.2	42.0	11.1	2.6	44.3	13.7	
지역	동구	9.0	26.5	41.9	16.8	5.8	35.5	22.6	
	중구	10.1	25.9	46.2	12.7	5.1	36.1	17.7	
	서구	7.8	33.1	39.7	13.1	6.3	40.9	19.4	
	유성구	5.7	30.7	49.2	9.8	4.5	36.5	14.3	
	대덕구	7.6	29.4	38.7	22.7	1.7	37.0	24.4	
거주 기간	1년 미만	5.3	10.5	57.9	5.3	21.1	15.8	26.3	
	1~5년	10.4	27.1	37.5	15.6	9.4	37.5	25.0	
	6~10년	8.0	36.8	40.2	10.3	4.6	44.8	14.9	
	11년 이상	7.5	29.9	43.8	14.6	4.3	37.4	18.8	



<부록>

| 조사 설 문 지 |

1. 조사 설문지

대전·충남 행정통합 및 대전시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타서치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출범(2026년 7월 목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통합은 대전의 과학기술·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산업·경제 기반을 결합하여 충청권 전체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대전시의회의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대전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향후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의 정책 수립 및 지역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조사 응답자의 개인정보 및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설문 참여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SQ

응답자 기본정보

SQ1.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SQ2.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7세 미만 ② 18세~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 ①번 조사 종료)

SQ3.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① 동구 ② 중구 ③ 서구 ④ 유성구 ⑤ 대덕구 ⑥ 대전 외(▶ 조사 종료)

SQ4. 대전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5년 ③ 6~10년 ④ 11년 이상

A**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인지 수준]**

A1. 선생님께서는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추진 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모르는 편이다
- ⑤ 전혀 모른다

B**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인식****[행정통합에 대한 기본 평가]**

B1. 오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긍정적이다(▶B1-1)
- ② 다소 긍정적이다(▶B1-1)
- ③ 잘 모르겠다
- ④ 다소 부정적이다(▶B1-2)
- ⑤ 매우 부정적이다(▶B1-2)

[긍정 이유]

B1-1. (①,②번 응답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서비스 확대
- ② 재정 여건 개선
- ③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④ 광역 인프라(교통·산업벨트 등) 구축
- ⑤ 추진 준비 및 실행 체계 강화 기대
- ⑥ 기타(직접 입력)

[부정 이유]

B1-2. (④,⑤번 응답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대전·충남 간 입장차이 조정 어려움
- ② 중앙정부 지원 부족
- ③ 지역 간 발전 격차 확대 우려
- ④ 대전시 자체 발전 저해 가능성
- ⑤ 추진 준비 부족 및 효과 불확실성
- ⑥ 기타(직접 입력)

[행정통합의 기대효과(도움정도)]

C1. 선생님께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다음 각 항목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항목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보통 이다	다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					
2	대전·충남의 자립경제 기반 강화					
3	대전·충남 간 생활경제권 통합 (교통·의료 등 연계 강화)					
4	수도권 대학·기업 유치 확대					
5	광역 교통망 확충 (BRT, 광역철도 등)					
6	세종시 행정수도와의 연계를 통한 대전의 위상 강화					
7	교통·산업 등 기반 시설 확충					
8	지역 문화 및 관광 활성화					

[우선 추진과제]

C2.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후, 대전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2순위)

- ①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자치권 확대
- ② 지역 인력·기술·정보의 통합 및 공유 강화
- ③ 시·도 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강화
- ④ 광역철도 등 광역사업의 공동 추진 및 유기적 운영 강화
- 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해결
- ⑥ 대전·충남의 공동 현안의 신속한 해결
- ⑦ 기타(직접 입력)

D

통합 추진 과정 및 문제점 인식

[추진 과정 평가]

D1. 선생님께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절차적 투명성)통합 추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주민의견 수렴)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설명회·토론회·온라인 참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지역 정체성 훼손 우려)행정통합으로 인해 지역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갈등 유발 가능성)통합 논의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어 지역 간 갈등으로 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투표 필요성 인식]

E1. 선생님께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다소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공론화 활동 참여 의향]

E2.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진행될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공론화 활동(설명회·토론회·온라인 의견 제출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다소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ITY COUNCIL

행정통합 및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발행: 2025년 12월 조사기관: (주)메타서치